


2015. 12. 11.
백범 기념관 대회의실

주최 :  Konrad Adenauer Stiftung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지부

주관 :  여명학교
Yeomyung School

시간표

시 간	내 용
13:30~14:00	등 록
14:00~14:20	사 회: 조명숙 교감(여명학교) 개회사: 이흥훈 교장(여명학교) 축 사: 에쉬보른 소장(콘라드 아데나워재단)
14:20~14:50	발표 1. “동독 사례에 비춰본 통일 후 탈정치사상교육” - Dr. Dietrich Lührs : 막데부르크(구 동독지역) 돔 김나지움 교장
14:50~15:20	토론 및 질문: 강구섭 박사 (KEDI, 독일 훔볼트대 교육학박사)
15:20~15:35	휴 식
15:35~16:15	발표 2. “북한에서 정치사상교육의 의미” - 현인애 박사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북한청진의대 졸, 이화여대 북한학박사) 발표 3. “정치사상교육을 받은 북한주민의 특이성과 통일준비 방안” - 정은찬 교수 (통일교육원, 북한원산경제대학 교수)
16:15~16:55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토론: 김수암 박사 (통일연구원, 서울대 정치학박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윤봉이 교사 (청진 제1사범대학 영어전공, 회령남문중학교 교사)
16:55~17:05	폐 회
17:05~18:00	저녁 만찬

차례

<발제문>

“동독 사례에 비춰본 통일 후 탈정치사상교육” 1

- Dr. Dietrich Lührs

: 막데부르크(구 동독지역) 돔 김나지움 교장

“북한에서 정치사상교육의 의미” 19

- 현인애 박사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원, 북한청진의대 졸, 이화여대 북한학박사)

“정치사상교육을 받은 북한주민의 특이성과 통일준비 방안”

- 정은찬 교수 33

(통일교육원, 북한원산경제대학 교수)

<토론문>

“남한 입국 후 탈정치사상교육의 남한 학교 현장에서 겪는 북한이탈교사들의 어려움” 47

- 윤봉이 교사

(청진 제1사범대학 영어전공, 회령남문중학교 교사)

Session 1

“동독 사례에 비춰본 통일 후 탈정치사상교육”

Dr. Dietrich Lührs

: 막데부르크(구 동독지역) 돔 김나지움 교장

동독 사례에 비춰본 통일 후 탈정치사상교육

디트리히 뤼어스 박사(Dr. Dietrich Lührs)

인사말

필자가 독일 구동독(DDR) 말기 시절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 서독과 동독에서도 공론화하지 못했던 주제에 대해서 강연을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독일에서는 그 누구도 구동독이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점을 예상하지 못했다. 많은 서독인들은 구동독을 제2의 독일 국가로 합의했으며, 심지어 이 안을 진지하게 대안 책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서독에서는 동독과 관련하여 독재 국가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동독에서도 통일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 당시 내부 경제관계자들과 경제전문가들은 파국적인 경제상황을 이유로 구동독이 더 이상 존립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했을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실수로 국경과 장벽개방을 텔레비전을 통해 공표한 유명한 정치국 대변인 귄터 샤뵉스키(Günther Schabowski)의 일화는 통일을 신속하게 실현시키는 전환의 실례로 증명되었다. - 동독과 서독에서 여러 주저하는 목소리와는 달리 -

필자는 서독과 이탈리아에서 학업을 마친 후 그 뒤를 이어 교사연수를 받았으며, 23.6세 전에 1992년 6월 30일 구동독 작센-안할트 주의 작은 도시인 아셔레벤(Aschersleben)의 교사로서 동독으로부터 부임 요청을 받았다. 이전에 필자는 여러 독일 연방주에 교사자리에 지원했다. 필자는 다음날 결정을 내려야 했다. 신학기가 바로 시작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필자의 전공은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였기 때문에, 우선시 되는 과목이 아니었다. 교사 임용은 무엇보다도 정치 과목이 우선시 되었다.

그러나 전공과목이 적합한 응시자들은 서독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은 후 응시를 취소를 했다. 실제로 교사 양성을 끝마친 교사들은 서독에서 동독 지역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 당시 동독지역의 임금은 서독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일 년 후 필자의 가족도 함께 왔다. 물론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변화는 작은 문화 충격이 있었다. 도시는 잿빛 색으로 지저분했으며, 일부는 심하게 붕괴되었고, 사회 기반시설은 부식되었으며, 무선전화기는 거의 없었고, 이동무선통신 네트워크는 이제 막 구축되고 있었다. 동절기 동안에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석탄 난방으로 인해 냄새가 났다.

그 당시 동독지역에서의 시민들의 분위기는 전환이 이루어진 3년 후에도 어수선했다. 통일에 대한 어떤 실망감과 체념이 나타났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전환기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공산주의 국가 체제에서는 단순히 실업자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구동독에서는 실업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동독의 경제는 쇠락했으며 경쟁력을 상실했다. 경제는 전환 이후 당연히 붕괴 될 수밖에 없었다. -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구동독의 몰락에 대해 결코 모든 구동독-주민들이 감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외하더라도 초반에 기대했던 정치적인 변화의 실망에 대한 수치는 현저하게 증가했다.

이런 질문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전환기를 보다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역사를 되돌아보았을 때, 다른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었거나, 심지어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만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혹은 보다 나은 성공을 위해 사람들은 분명 몇 가지 근본적인 현안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다:

1. 독재국가에서는 억압받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이 중에서도 삶을 영위하며, 지원받고 그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다: 공무원, 군인, 교사

이 체제(System)로부터 지원받는 대다수는 체제의 몰락에 대해서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 게다가 독재 국가 안에서 인생을 설계하는 그룹이 있다. 독재 국가에서는 국가가 모든 것을 돌봐줄 수 있으며 또한 보다 더 안락할 수도 있다. 시민들의 일부만이 체제 변화를 환영했다는 점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독재 체제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자유의사로 보다 나은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 그렇다면 구동독에서의 삶은 어떠했을까?

구동독에서의 삶은 안전했다. 예컨대 남녀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출생 이후 아이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탁아소에서 전일 돌봐주었다. 이점은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과로 생각하고 있다. 사람들은 일정 수준의 복지를 누렸으며, 그 누구도 굶주리지 않았다. 국가가 모든 것을 돌봐주었다. 제한된 여행의 자유만큼이나 소수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의견이나 활동영역의 자유역시 존재했으며, 서독으로는 장벽과 철조망으로 이루어진 국경선이 있었고, 국경선을 넘는 것은 금지 되었으며, 생명이 위험했다.

3. 구동독 시민들은 서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정치적인 변화와 함께 그들은 어떤 희망과 기대를 연상했을까? 서독으로의 여행은 단지 소수만이 허락되었으며, 상당수 서독에 친척들이 있었다. 그리고 물론 금지되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독의 텔레비전을 수신할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러한 기회는 그들의 지식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중요한 근원이 되었다. 물론 광고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변화로부터 사람들은 많은 복지와 여행의 자유를 희망했다.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치 활동 및 참여의 자유도 물론 기여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단지 하위역할을 맡았을 뿐이다.

4. 구동독-시민들의 기대가 실현되었을까? 통일 전에 서독에서 경험했었던 동독의 이미지는 어떤 다른 모습이었을까? 혹은 통일 이후 체감되는 현실성, 혹은 통일 이후 서독의 이미지가 더 좋아졌다고 말했을까? 그와 동시에 이러한 아주 중요한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인간은 과거를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과거에 어려웠던 일들을 무의식적으로 배제시키거나, 부분적으로 즐겨워하며, 그 결과 긍정적으로 승화시킨다. 사람들은 미래로부터 물론 좋은 일들만을 희망하고 있다.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희망 사이에서 현재(現在)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쉽지 않다. 과거의 문제를 잊는 동안에 현재의 문제는 마치 더 심각한 것처럼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앞에서 많은 동독인들은 현재 민주주의 제도를 매우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

으며 과거에 공정하다고 느끼는 점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기회를 갖게 된다면, 진지하게 구제도를 다시 환원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간이란 그런 것이다: 사람은 현재의 장점을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그렇지만 현재에서는 나쁜 점을 보고 있으며, 과거를 미화시키고 있다.

통일은 형식적으로 구동독이 서독으로 이식되었다. 많은 동독인들의 꿈, 특히 동독의 지식인들은 제 3의 길을 꿈꾸었으며, 그로부터 인간적인 사회주의 꿈은 환상에서 빠르게 깨어났다. 그 이유는 동독의 일반 대중들이 빠른 통일을 원했기 때문이다. 많은 시위 현장에서 “독일 마르크가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이곳에 머무를 것이며, 독일 마르크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독으로 가겠다”라는 상징적인 구호는 중요한 동기 유발로 나타났다. 사실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통일과 관련하여 많은 동독인들을 위해 아무것도 도입되지 못했으며, 모든 것이 서독으로부터 전이되었거나 전이 되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인들은 서독인들 스스로가 어떤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오만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람들은 승자 속에서 패자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실제로 적지 않은 서독인들이 이에 상응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덧붙이자면, 많은 서독의 공무원들과 직장인들은 동독에서의 재건 작업과 행정 업무, 그 밖의 다른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동독으로 갔다. 많은 서독인들은 이것을 경력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다. 동독으로 온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직책으로 갈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것은 또한 통일의 일부요소로 동독인들에게 어떠한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동독인들은 인계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추후에 많은 동독인들이 무의식적으로 과거 구동독의 실재를 본인과 일치화시켰고 그 결과 구동독이 독재 국가라고 평가될 때 본인이 공격을 받는다고 느꼈다. 적어도 이러한 반응은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만약 정치 체제를 불법 국가로 부르게 된다면, 이 불법 국가에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시민의 자유를 박탈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독재 국가에서의 삶이 가치가 있었나? 이점에서 물론 구별되어야 하는 점은 구동독과 관련하여 언급해야만 할 것이다: 물론 사람들은 구동독 시절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며, 가족, 교우 관계, 직장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필자는 여기서 서독과 동독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 요컨대 사람과 체제 간의 결핍된 민감성을 구분하고자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많은 동독인들에게 있어서 이상하게 혼합된 열등감이 존재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도덕적인 열등감이 생겨났다. 한번은 “너는 진정한 서독인이 아니야, 너는 우리들 중 한명 같아” 혹은 “나는 너가 서독에서 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라고 필자가 받은 가장 큰 칭찬이었다. 이 모든 것은 두 개의 상이한 국가와 체제를 통합하는데 지금까지 행해진 정치사상 교육과 그로 인한 파급효과는 물론, 서로 상이한 두 국가의 사람들을 아울러 어떻게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가는 무관한 문제이다.

필자는 두 개의 국가가 하나의 국가로 통일이 될 수 있는 성공은 올바른 정치적인 결정이나 경제적인 결정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감성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지금까지 독재 국가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체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점을 숙고해야 함을 확신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유에 대처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

을 뿐 아니라, 어렵다는 사실이다.

교육시스템에 관련하여 이 영역에서는 물론 하루아침에 중대한 개혁이 있었다. 구동독에서는 단일학제 시스템(ein einheitliches Schulsystem)이었다. 단일학제 시스템에서 학생들은 1학년에서부터 8학년까지, 나중에 10학년까지 공동으로 학습했다. 그리고 나서 9학년에서 12학년, 혹은 11학년에서 12학년의 일부의 학생들만이 대학입학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아비투어로 종결되어 대학입학 자격을 받을 수 있었다. 사립학교는 존재하지 않았다. 상당수는 정치적인 이유로 아비투어에서 배제되었다.

전환 이후 동독의 5개의 신연방주는 서독의 학교시스템을 도입했다. 덧붙여 독일연방공화국의 학교시스템의 특수성을 언급해야만 한다. 즉, 독일에는 하나의 학교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서독의 11 주의 연방주들은 고유의 학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동독에서는 5개의 신연방주에 상응하는 수에 따라 다소 다른 5개의 상이한 학교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구동독 시절에는 단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그 당시 하나의 학교형태만 존재했다. 오늘날 독일에는 각 신연방주마다 상이한 학교형태가 존립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전체를 열거하는 것은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작센-안할트 주에서는 4년제의 그룬트슐레(초등학교)가 있다. 이 과정을 마친 후 이른바 제쿤다슐레(Sekundarschule), 종합학교(Gesamtschule), 공동 사회학교(Gemeinschaftsschule) 또는 전통적인 김나지움(Gymnasium)을 선택할 수 있다. 김나지움으로의 전환율은 20년 전 약 30% 였으며, 오늘날에는 40% 이상 달하고 있다. 필자가 판단을 할 수 있는 한, 전환 이후 학교시스템의 변화는 문제가 없었다. 더 크나큰 문제가 있었다: 이전에 독재 국가 체제에서 가르쳤던, 그 동일한 교사가 또한 새로운 체제에서도 가르칠 수 있을까? 수학이나 자연과학 과목의 교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구동독에서는 인문학이나 특히 언어 과목보다 이러한 과목들은 더 많은 가치와 시간이 주어졌다. 영어 과목의 경우 수동태 정도는 가르칠 수 있어야 했다. 더 이상 원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정치 과목이나 역사과목, 모국어인 독일어 과목은 구동독 체제에 있어서 민감한 과목들이었다.

따라서 질문을 제기 하면: 서독을 노동계급의 적(Klassenfeind)으로 보면서, 구동독은 참된 정의의 체제를 구현하고 있다고 독재 정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임무를 수행한 과목의 교사들이 전환 이후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

중요한 직책과 관련하여 전환 이후 모든 학교 교장들은 교체되었다. 왜냐하면 구동독 시절의 학교 교장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사회주의통일당(SED)과 “연계”되어 있고 사통당에 속해야만 했다. 다른 교사들과 관련하여 슈타지에 속해서 첩보활동을 하거나 이런 활동을 한 교사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들은 학교를 떠나야만 했다.

필자 역시 전환 이후 몇 년 동안 이러한 심사를 여러 번 경험했으며, 간헐적으로 교사들은 학교에서 해고되었다. 그리고 다른 교사들은 학교에 잔류했다. 이점은 옳은 선택이었다. 교사들이 충분히 보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독에서도 동독으로 지원할 충분한 인력이 없었다. 단지 이전에 잘못된 체제에서 살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잘못된 체제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을 해고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과거 구동독-교사의 대다수를 인계받아야만 했다. 직업교육(Ausbildung)과 관련하여 구동독-교사들은 서독교사들에 비해 그렇게 역량이 나쁘지만은 않았다. 물론 교사 교육 및 요구는 항상 사회주의 시스템이 유일하고 진정한 시스템으로 인

문 과목의 교사들을 상대로 개재되었다. 다시 말해, 토론이나 이의는 원하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부분적으로 제지를 당했다.

서독에서는 60년대와 70년대부터 대부분 정치 및 역사수업이 기정사실과 수치만을 학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학생들을 논쟁을 통해서 가르치며 훈련시키고 있다.

구동독 교사들로부터 이러한 수업방식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와는 반대로 전환 이후 구동독의 많은 교사들은 하루아침에 새로운 체제 아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었다. 교사들은 개인의 연령에 따라,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몇 년을 가르쳤거나, 지금은 - 어느 경우든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직면했다. - 갑자기 잘못된 내용으로 판명되거나, 적어도 정확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다.

동독 교사들은 그들의 서독 동료들에 비해서 비정치적이었다. 이것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통용되었다. 동독 교사들이 갑자기 이전보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다면, 그들의 수많은 학생들조차도 그들을 신뢰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전환 이후 구동독의 교사들을 위한 정치적인 재교육에 대한 초안은 없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위한 새로운 체제에 대한 재교육의 계획은 존재하지 않았다. 어차피 소용없었을 것이다. 40년 이상 공산주의 체제를 통해 정치사상 교육을 받은 이들이 정치사상 교육에 반(反)해서 대답하는 것은 성공할 가망성이 없었을 것이다. 새로운 체제에서 학생들에게 또한 새로운 자유를 평화롭고 신뢰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기 위해서 서독에서 수많은 교사들을 동독으로 보내는 것은 다만 이론적으로 본다면 대안책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인력이 부족했다. 학부모 및 학생들과 함께 협력하는 과정도 잘못했다. 사람들은 이 새로운 교사들을 이방인으로 느꼈을 것이다. 신임 교사들은 구동독의 삶과 구동독에 대해서조차 거의 혹은 전혀 아는 것이 없었다.

필자가 1992년부터 1999년까지 재직 중이었던 전환 이후 그 때의 국립학교를 회상해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싶다. 첫째, 학교시스템의 외관상의 개조는 성공적이었다.- 가벼운 연습처럼 보여졌다- 둘째, 내부적인 변화도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이 내부적인 변화에 있어서는 특별한 계획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과 교사들은 새로운 체제에 정돈 되었고 그 속에서 잘 지냈다. 게다가 교사들도 매우 잘 지냈다. 직업은 안정적이었고, 중산층이 이에 속했다. 이 모든 것은 새로운 것에 만족해야 되는 이유였고, 또한 학생들에게도 확산되었다.

사립학교는 전환 이후 동독에서 서서히 생겨났다. 그 사이 작센-안할트 주에서는 약 10%의 학생들이 사립학교로 진학했으며 이는 독일 평균보다 약간 높다. 필자가 1999년부터 근무하고 있는 막데부르크의 동김나지움은 기독교 학교로서 1991년 학부모로부터 민간인의 주도로 1991년 설립되었다. 여기에서 교사는 본인의 의지로 지원할 수 있었다. 물론 구동독에서 근무했던 교사들도 있다. 왜냐하면 교사들 중에서는 체제에 충성하지 않은 이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오래된 동지” 즉, 체제에 충성했던 교사들을 완전히 배제하고는 운영을 할 수 없었다. 전반적인 차이점과 교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동독의 사립학교는 명확하게 국립학교와 구별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동독에서 가르치던 교사의 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25년 후 통일에 대한 수용의 문제는 점점 작아졌으며, 어느 정도까지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조정되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구동독-교사의 불안감과 그들의 정치적인 무관심과 관련하여, 이는 독일 전체에 있어 일종의 정치 피로감과 그리고 일부는 정치 혐오를 규명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정치 활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준비성과 적극적인 정책을 형성하든지 아니면 투표하러 가야한다. 사람들이 더 잘 지낼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 그러나 동독에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서독에 비해 훨씬 더 높을 것이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교사들은 서독은 물론 동독의 학생들에게 이에 상응하게 대응해야만 한다.

남/북한과 동독/서독을 비교함에 있어 필시 상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필자가 정확하지 않을 것을 언급했다면 양해를 구한다:

1. 남 · 북한 분단의 시기는 이제 독일보다 더 길다.
2. 서독과 비교해본다면 구동독은 매우 가난했으나, 동구권의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경우 다른 공산 국가들보다 구동독의 사람들은 풍요로움을 누렸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한 국가로 남·북한의 차이는 1991년 동·서독보다 더 격차가 커지고 있다.
3. 동·서독의 사람들은 남·북한과는 달리 서로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 - 물론 쉽지 많은 않았으며 감시를 당했다. 동독으로의 방문여행 신청은 가능했지만 그러나 서독으로의 방문 여행은 단지 소수의 선발된 사람과 은퇴자들이었다. 서신과 소포 발송(그 당시 이메일은 아직 없었다)은 가능했지만 물론 감시를 당했다.
4. 동독의 거의 전 지역에서 서독의 TV 시청과 라디오 청취가 가능했다. 그 결과 드레스덴 지역까지는 이른바 “무지(無知)의 계곡(Tal der Ahnungslosen)”으로 불리었다. 한국의 경우 완전히 다를 것이다. 서로에 대해 분명히 조금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독일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경제 분야와 복지 분야의 거대한 차이점은 독일의 통일보다 확실히 상당한 노력을 요구할 것이다. 남·북한의 사람들이 서로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여부를 떠나 즉, 독일의 경우가 그러했듯이 성공적인 통일의 과정을 위해서는 더 큰 어려움을 의미하지만, 필자가 판단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당시 구동독 시절의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북한의 사람들이 훨씬 더 혹독하고 가난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아마도 사실일 것이다. 사실 남한의 차이는 매우 크지만 그러나 동·서독의 통일은 심지어 단순했다. 북한 체제가 추후에 무엇인가 긍정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 필자는 상상이 되지 않는다.

양 독일의 통일에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질문을 제기해본다. 통일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는지 언급하고 싶다: 통일은 독일 역사에서 행운이었으며 헬무트 콜(Helmut Kohl)총리가 정확한 시기에 그 기회를 인식했다.

남·북한에도 유사한 일이 주어지길 희망하는 바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rede

Es ist mir eine Ehre, hier vor Ihnen einen Vortrag halten zu dürfen über ein Thema, über das man sich in Deutschland vor dem Ende der DDR keine Gedanken gemacht hat und über das man schon gar nicht öffentlich diskutiert hat, weder damals im Westen Deutschlands noch im Osten.

Keiner hat in Deutschland mit dem nahen Ende der DDR gerechnet, viele im Westen Deutschlands hatten sich mit der DDR als zweitem deutschen Staat arrangiert, manche diesen sogar als ernst zu nehmende Alternative betrachtet und das Wort Diktatur hat man im Westen für die DDR kaum verwendet.

Auch im Osten hat man mit der Wiedervereinigung kaum nicht gerechnet.

Wenn überhaupt konnten nur Insider und Wirtschaftsexperten damals davon ausgehen, dass die DDR aufgrund ihrer katastrophalen wirtschaftlichen Situation nicht mehr lange Bestand haben konnte.

Der berühmte Versprecher des Politbüromitgliedes Günther Schabowski, mit dem er aus Versehen über das Fernsehen die Grenz- und Maueröffnung verkündet hatte, steht beispielhaft für die Wende und die Schnelligkeit, mit der sich die Wiedervereinigung vollzog – im Gegensatz zu vielen zaudernden Stimmen in Osten und West.

Nach meinem Studium in Westdeutschland und Italien und der anschließenden Lehrerausbildung erhielt ich vor 23 ½ Jahren am 30. Juni 1992 aus Ostdeutschland das Angebot, als Lehrer in Aschersleben, einer Kleinstadt in Sachsen-Anhalt in der ehemaligen DDR, eine Stelle anzutreten. Ich hatte mich zuvor in mehreren Bundesländern beworben.

Über Nacht musste ich mich entscheiden. Denn es musste schnell gehen, das neue Schuljahr stand vor der Tür. Ich war jedoch nicht erste Wahl, weil meine Fächer, die Alten Sprachen Griechisch und Latein, nicht gesucht wurden, sondern vor allem das Fach Politik.

Aber die Bewerber vor mir mit den richtigen Fächern hatten wieder abgesagt, nachdem sie bessere Stellen im Westen bekommen hatten.

Eigentlich wollte kein fertig ausgebildeter Lehrer vom Westen in den Osten gehen, auch weil die Löhne im Osten damals deutlich geringer waren als im Westen.

Ich nahm das Angebot an und holte nach einem Jahr meine Familie nach.

Allerdings war der Wechsel von West nach Ost ein kleiner Kulturschock. Die Stadt war grau und hässlich, z.T. sehr zerfallen, die Infrastruktur war marode, Festnetz-Telefone gab es kaum und das Mobilfunknetz wurde gerade erst errichtet und die Luft roch in der kalten Jahreszeit nach den umweltschädlichen Kohleheizungen.

Die Stimmung der Bevölkerung im Osten war damals drei Jahre nach der Wende

sehr uneinheitlich.

Die Freude über die Wiedervereinigung war einer gewissen Ernüchterung und Resignation gewichen.

Und in der Tat hat die Wende für viele Menschen erhebliche Veränderungen gebracht. Arbeitslosigkeit hatte es in der DDR nicht gegeben, weil es diese in kommunistischen Systemen einfach nicht geben darf.

Doch die Wirtschaft der DDR war heruntergekommen und nicht wettbewerbsfähig.

Sie ist nach der Wende logischerweise zusammengebrochen – mit der Folge, dass viele ihre Arbeit verloren.

Abgesehen davon, dass über den Niedergang der DDR keineswegs alle DDR-Bewohner begeistert waren, wuchs nach anfänglichen Erwartungen die Zahl der über die politischen Wende Enttäuschten nicht unerheblich.

Wenn man sich daher die Frage stellt, was hätte man rückblickend anders machen können oder sogar machen müssen, damit die Wende besser gelungen wäre oder besser gelingt, muss man sich über einige Grundsatzfragen und Grundprobleme im Klaren werden:

In einer Diktatur leben nicht nur Unterdrückte, sondern natürlich auch diejenigen, die diese am Leben halten, unterstützen und davon profitieren: Staatsbeamte, Militärs, Lehrer.

Ein Großteil dieser Stützenden des Systems wird über dessen Untergang alles andere als begeistert sein. Zudem gibt es eine Gruppe, die sich mit dem Leben in der Diktatur eingerichtet hat. Das Leben kann in einer Diktatur, in der sich der Staat um alles kümmert, auch bequemer sein.

Man muss also davon ausgehen, dass nur ein Teil der Bevölkerung den Systemwechsel begrüßt. Das ist natürlich bei denjenigen, die aus einem diktatorischen System fliehen, etwas völlig anderes. Denn diese haben sich aus eigenem Antrieb für ein anderes, ein besseres Leben entschieden.

Wie war das Leben in der DDR?

Das Leben in der DDR war sicher, man hatte Arbeit und zwar sowohl Frauen als auch Männer. Die Kinder wurden relativ schnell nach der Geburt tagsüber in eine Krippe abgegeben, was viele auch heute noch als Errungenschaft ansehen. Man hatte ein gewisses bescheidenes Wohlstand, Hunger musste keiner. Der Staat kümmerte sich um alles.

Politische Meinung- und Betätigungsfreiheit gab es ebenso wenig wie Reisefreiheit und zum Westen hingab es eine Grenze mit Mauer und Stacheldraht, die zu überwinden verboten und lebensgefährlich war.

Welche Vorstellungen hatten die DDR-Bürger vom Westen und welche Hoffnungen und Erwartungen verbanden sie mit der politischen Wende?

Die Ausreise in den Westen war nur wenigen vergönnt, aber nicht wenige hatten Verwandte im Westen und viele hatten die Möglichkeit Westfernsehen zu empfangen,

was allerdings verboten war. Dennoch war dies eine der Hauptquellen, aus der man sein Wissen bezog. Und hier spielte natürlich die Werbung eine nicht unerhebliche Rolle.

Von der Wende erhofften sich viele einen Wohlstand und Reisefreiheit. Die Meinungsfreiheit und die der politischen Betätigung und Beteiligung spielte sicher auch eine Rolle, aber bei dem Großteil der Bevölkerung nur eine nachgeordnete Rolle.

Sind die Erwartungen der ehemaligen DDR-Bürger in Erfüllung gegangen? Wie verschieden war das Bild der Ostdeutschen vor der Wende vom Westen von der erlebten oder gefühlten Wirklichkeit nach der Wende oder besser gesagt vom Bild vom Westen nach der Wende?

Über einen ganz wichtigen Aspekt muss man sich dabei im Klaren sein.

Wir Menschen neigen dazu, die Vergangenheit zu verklären. Die Schwierigkeiten, die man in der Vergangenheit hatte, verdrängt man unterbewusst aber z.T. auch gerne, so dass das Positive überwiegt.

Von der Zukunft erhofft man sich natürlich auch nur Gutes.

Und zwischen dieser Erinnerung an das Vergangene und der Hoffnung auf die Zukunft hat die Gegenwart es nicht leicht, gerecht und objektiv beurteilt zu werden.

Während vergangene Probleme vergessen sind, werden gegenwärtige Probleme als umso schlimmer empfunden.

Vor diesem Hintergrund wundert es nicht, dass viele Ostdeutsche das jetzige demokratische System durchaus skeptisch sehen und das alte als gerechter empfinden.

Dabei würde, wenn man die Gelegenheit gäbe, wohl kaum einer ernsthaft das alte System gerne wieder zurückhaben: Aber so ist der Mensch nun einmal: Man nimmt die Vorteile der Gegenwart gerne an, sieht jedoch in der Gegenwart das Schlechte und verklärt das Vergangene.

Die Wiedervereinigung bestand formal darin, dass die DDR in der Bundesrepublik aufging.

Der Traum vieler, vor allem intellektueller Ostdeutscher von einem dritten Weg, von einem menschlichen Sozialismus war schnell ausgeträumt. Dies lag auch daran, weil die breite Masse der ostdeutschen Bevölkerung auf eine rasche Wiedervereinigung setzte. Der symbolhafte Spruch vieler Demonstrationen „Kommt die D-Mark, bleiben wir, kommt sie nicht, geh'n wir zu ihr“ zeigt einen wichtigen Beweggrund.

Für viele Ostdeutsche hat jedoch gerade die Tatsache, dass man formal praktisch nichts mit in die Wiedervereinigung eingebracht hat, sondern dass man alles vom Westen übernommen hat oder übernehmen musste, zu dem Gefühl geführt, dass die Westdeutschen sich als etwas

Besseres fühlen und arrogant auftreten.

Man fühlte sich als Besiegte unter Siegern.

Und in der Tat sind nicht wenige Westdeutsche mit einem entsprechenden Gehabe

aufgetreten.

Hinzukommt, dass viele westdeutsche Beamte und Angestellte nach Ostdeutschland gegangen sind, um dort Aufbauarbeit in den Verwaltungen und anderswo zu leisten.

Für viele Westdeutsche war dies ein Karrieresprung. Es kamen aber auch solche, die unter normalen Umständen für Führungspositionen nicht in Frage gekommen wären.

Auch dies ist ein Bestandteil der Wiedervereinigung, die eben auch deshalb von vielen Ostdeutschen als Übernahme empfunden wurde, bei der sie nichts zu sagen hatten.

Dies führte dazu, dass sich im Nachhinein viele Ostdeutsche mehr unterbewusst als wirklich überlegt mit der ehemaligen DDR irgendwie identifizieren und sich angegriffen fühlen, wenn die DDR als Diktatur hingestellt wird.

Diese Reaktion ist zumindest teilweise verständlich. Denn wenn ein politisches System als Unrechtsstaat bezeichnet wird, der seine Menschen unterdrückt und seine Bürger der Freiheit beraubt, dann stellt sich zwangsläufig die Frage: War oder ist das Leben in einer Diktatur lebenswert?

Hier muss man natürlich differenzieren und in Bezug auf die DDR sagen: Natürlich konnte man ein lebenswertes Leben in der DDR führen und Glück in der Familie, im Freundeskreis und auch im Beruf empfinden.

Hier sehe ich ein Grundproblem in der Beziehung zwischen West- und Ostdeutschen, nämlich in der mangelnden Sensibilität auf beiden Seiten, zwischen Menschen und Systemen zu unterscheiden.

Bei vielen Ostdeutschen ist daraus eine seltsame Mischung aus Unterlegenheitsgefühl und Trotz auf der einen Seite und moralischem Überlegenheitsgefühl auf der anderen Seite entstanden.

Das größte Lob, dass ich einmal bekommen habe, war, als mir attestiert wurde „Du bist gar kein richtiger Westdeutscher, du bist mehr wie einer von uns“ oder: „Ich wusste gar nicht, dass du aus dem Westen kommst.“

Dies alles hat nur auf den ersten Blick nichts mit der Frage zu tun, wie geht man bei der Zusammenführung zweier unterschiedlichen Staaten und Systeme mit der bisher erfolgten Indoktrination und deren Auswirkungen um, vor allem, wie geht man als Menschen von zwei unterschiedlichen Staaten miteinander um.

Ich bin überzeugt, dass der Erfolg einer Wiedervereinigung zweier Staaten, nicht nur davon abhängt, dass die richtigen politischen und wirtschaftlichen Entscheidungen getroffen werden, sondern nicht zuletzt auch davon, dass darin das Verständnis für menschliche Befindlichkeiten einfließt, dass man überlegt, wie werden die Menschen, die bisher in einer Diktatur gelebt haben, damit umgehen, in einem neuen ihnen unbekannten System zu leben.

Hier muss man auch bedenken, dass es für viele nicht nur ungewohnt, sondern auch schwierig ist, mit der neuen Freiheit umzugehen.

Was das Bildungssystem angeht, so gab es natürlich auch in diesem Bereich von heute auf morgen erhebliche Neuerungen.

In der DDR gab es ein einheitliches Schulsystem, in dem die Schüler von der ersten bis zur achten, später bis zur zehnten Klasse gemeinsam lernten. Danach schlossen sich für einen geringen Teil der Schüler die Klassen 9–12, bzw. 11–12 ein, die zum Abitur und damit zur Berechtigung auf ein Hochschulstudium führten. Es gab keine privaten Schulen. Nicht wenige wurden aus politischen Gründen vom Abitur ausgeschlossen.

Mit der Wende übernahm der Osten, also die fünf neuen Bundesländer, auch das Schulsystem des Westens.

Dabei muss auf eine Besonderheit im Schulsystem der Bundesrepublik hingewiesen werden.

Es gibt nämlich nicht das eine Schulsystem in Deutschland, sondern jedes der elf alten ehemals westdeutschen Bundesländer hat sein eigenes Schulsystem. Und auch in Ostdeutschland gibt es entsprechend der Anzahl der fünf neuen Bundesländer fünf verschiedene Schulsysteme, die sich mehr oder weniger stark unterscheiden.

Während es in der DDR also nur ein System gab mit jeweils nur einem Schultyp, gibt es heute in Deutschland in jedem Bundesland verschiedene Schultypen, die hier in ihrer Gesamtheit aufzuzählen, keine Zeit wäre.

In Sachsen-Anhalt, dem Bundesland, in dem ich lebe und arbeite, gibt es eine vierjährige Grundschule. Danach kann man sich für die sogenannte Sekundarschule, die Gesamtschule, die Gemeinschaftsschule oder das klassische Gymnasium entscheiden.

Die Übertrittsquote auf das Gymnasium betrug vor 20 Jahren ca. 30 %, heutzutage mehr als 40%.

Die Veränderungen im Schulsystem nach der Wende sind, soweit ich das beurteilen kann, kein Problem gewesen.

Das viel größere Problem ist die Frage: Können dieselben Lehrer, die zuvor in einem diktatorischen System unterrichtet haben, auch in einem neuen System unterrichten?

Es geht hierbei weniger um Mathematik oder die naturwissenschaftlichen Fächer.

In der DDR wurde auf diese Fächer mehr Wert und Zeit gelegt als auf die geisteswissenschaftlichen Fächer, vor allem als auf die Sprachen.

Englisch sollte man höchstens passiv beherrschen. Mehr war unerwünscht.

Aber die Fächer Politik und Geschichte und auch Deutsch als Muttersprache sind für das System der DDR sensible Fächer gewesen.

Es stellte sich also die Frage: Wie können diese Fächer nach der Wende von den Lehrern unterrichtet werden, die zuvor in der Diktatur die Aufgabe hatten, den Schülern beizubringen, dass die DDR das wahre gerechte System verkörpert, während im Westen der Klassenfeind herrscht?

Was die Führungspositionen angeht, so wurden nach der Wende alle Schulleiter ausgetauscht. Denn um in der DDR Schulleiter zu werden, musste man „auf Linie sein“ und der SED, der sozialistischen Einheitspartei Deutschlands, angehören.

Was die anderen Lehrer angeht, so mussten nur diejenigen gehen, die dem

Geheimdienst, der Staatssicherheit, angehörten, bzw. diejenigen, denen man dies nachweisen konnte.

Ich selber habe mehrmals solche Überprüfungen noch einige Jahre nach der Wende miterlebt und auch wie dann vereinzelt Lehrer aus dem Schuldienst entlassen wurden.

Alle anderen Lehrer blieben. Und das war auch die richtige Entscheidung.

Denn es hätte gar nicht genug Ersatz gegeben. Aus dem Westen wäre nicht genug Personal bereit gewesen, in den Osten zu gehen.

Außerdem wäre es psychologisch falsch gewesen, Tausende von Menschen nur deswegen zu entlassen, weil sie vorher im falschen System gelebt und gelehrt haben. Sie hatten sich das ja nicht aussuchen können.

Man musste also aus vielerlei Gründen einen Großteil der ehemaligen DDR-Lehrer übernehmen.

Was die Ausbildung angeht, so ist die der DDR-Lehrer nicht schlechter gewesen als die im Westen.

Allerdings stand die Lehrer-Ausbildung bzw. die Anforderung an die Lehrer in den geisteswissenschaftlichen Fächern immer unter der Vorgabe, dass das sozialistische System das einzig wahre System ist.

Das heißt, Diskussion oder Widerspruch war nicht gewollt, und wurde z.T. sogar unterbunden.

In Westdeutschland besteht seit den 60er und 70er Jahren ein Großteil des Politik- und Geschichtsunterrichts nicht nur im Lernen von Fakten und Zahlen, sondern vor allem darin, nicht nur andere Meinungen zuzulassen, sondern auch darin, Schülern das Streitgespräch beizubringen und sie darin zu schulen.

Das konnte man von ehemaligen DDR-Lehrern nicht erwarten. Im Gegenteil, nach der Wende ist bei vielen DDR-Lehrern, die ja über Nacht zu Lehrern unter einem neuen System geworden sind, eine Verunsicherung eingetreten. Was sie je nach ihrem persönlichen Alter mehr oder weniger viele Jahre unterrichteten, war nun – jedenfalls die gesellschaftlichen und politischen Fragen betreffend – auf einmal falsch oder zumindest in Frage gestellt.

Ostdeutsche Lehrer sind im Gegensatz zu ihren westdeutschen Kollegen weitgehend unpolitisch. Das gilt zum großen Teil nach wie vor. Sie wären für viele ihrer Schüler auch unglaublich gewesen, wenn Sie plötzlich ganz anderes gesagt hätten als vorher.

Nach der Wende gab es kein Konzept der politischen Umerziehung für die ehemaligen DDR-Lehrer, keinen Plan, Lehrer und Schüler und durch sie deren Eltern für das neue System umzuerziehen.

Es hätte auch keinen Zweck gehabt. Auf über 40 Jahre Indoktrination durch ein kommunistisches System mit einer Gegenindoktrination zu antworten, wäre nicht erfolgversprechend gewesen.

Rein theoretisch hätte es zwar die Alternative gegeben, Lehrer in großer Anzahl aus dem Westen in den Osten zu senden, um das neue System und damit auch die neuen Freiheiten den Schülern sanft und glaubhaft beizubringen.

Aber dazu fehlten die personellen Voraussetzungen. Auch in der Arbeit mit Eltern und Schülern wäre dies falsch gewesen. Man hätte diese neuen Lehrer als Fremdkörper empfunden, die vom Leben in der DDR und von der DDR selbst keine oder nur wenig Ahnung hatten.

Wenn ich auf die Zeit nach der Wende an der staatlichen Schule zurückblicke, in der ich von 1992–1999 tätig gewesen bin, so möchte ich sagen, dass erstens der äußere Umbau des Schulsystems gelungen ist – und das war wie gezeigt die leichtere Übung – und dass zweitens auch die innere Wandlung gelungen ist.

Zwar lag dieser inneren Wandlung kein eigenes Konzept zugrunde, aber gerade dadurch ist der Erfolg eingetreten.

Im Laufe der Zeit haben sich die Menschen und somit auch die Lehrer mit dem neuen System arrangiert und leben darin gut. Was die Lehrer angeht, sogar sehr gut. Der Beruf ist krisensicher, man gehört der Mittelschicht an. All das ist eigentlich ein Grund mit dem Neuen zufrieden zu sein und dies auch an seine Schüler weiterzugeben.

Privatschulen sind nach der Wende im Osten langsam aufgekommen.

Inzwischen liegt Sachsen-Anhalt mit fast 10 % Schülern, die auf Privatschulen gehen, leicht über dem Durchschnitt in Deutschland.

Das Domgymnasium in Magdeburg, wo ich seit 1999 tätig bin, ist 1991 auf Privatinitiative von Eltern als christliche Schule gegründet worden. Die Lehrer hat man sich hier bewusst aussuchen können.

Natürlich waren und sind auch hier Lehrer tätig, die schon in der DDR Lehrer waren. Denn es gab auch unter diesen solche, die nicht systemtreu waren.

Ganz ohne „alte Genossen“, also systemtreue Lehrer, kam man allerdings auch hier nicht aus.

Insgesamt aber unterschied und unterscheidet sich eine Privatschule im Osten, was die Zusammensetzung der Lehrerschaft angeht, deutlich von staatlichen Schulen.

Mit der Zeit wird natürlich die Zahl der Lehrer, die auch zu DDR Zeiten unterrichtet haben, immer geringer. Nach 25 Jahren stellt sich das Problem der Akzeptanz der Wiedervereinigung immer weniger, es regelt sich dies gewissermaßen auf natürliche Weise.

Was die vorhin angesprochene Verunsicherung der DDR-Lehrer und ihr politisches Desinteresse angeht, so ist festzustellen, dass für Deutschland insgesamt eine gewisse Politikmüdigkeit, zum Teil auch Politikverdrossenheit festzustellen ist.

Das Interesse am politischen Geschehen sinkt zunehmend, ebenso wie die Bereitschaft, Politik aktiv mit zu gestalten oder auch nur zur Wahl zu gehen.

Je besser es den Menschen geht, desto weniger ist man offenbar an Politik interessiert.

Hier dürfte das Desinteresse an Politik im Osten jedoch noch größer sein als im Westen.

Insofern sollten gerade die Lehrer an den höheren Schulen auf ihre Schüler entsprechend einwirken – in Ost wie in West.

Was den Vergleich Süd-/Nordkorea und BRD/DDR angeht, so wird es sicherlich Unterschiede geben, die man berücksichtigen muss.

Ich bitte, mir zu verzeihen, wenn ich hier Falsches sage:

Die zeitliche Dauer der Trennung beider Staaten ist inzwischen in Korea deutlich länger als in Deutschland.

Die DDR war zwar im Vergleich mit Westdeutschland wesentlich ärmer, aber im Vergleich mit anderen Staaten im Ostblock führend und die Menschen in der DDR wohlhabender als in anderen kommunistischen Ländern.

Nordkorea gehört zu den ärmsten Ländern auf der Welt, so dass der Abstand zwischen Nordkorea und Südkorea viel größer ist als 1991 der zwischen Ost- und Westdeutschland.

Die Menschen in Ost- und Westdeutschland konnten anders als in Nord- und Südkorea Kontakt miteinander haben – zwar nicht leicht und überwacht. Aber Besuchsreisen in den Osten waren auf Antrag möglich, Besuchsreisen in den Westen nur für wenige Auserwählte und für Rentner. Das Senden von Briefen und Paketen (E-Mail gab es ja damals noch nicht) war ebenfalls möglich, wurde allerdings auch überwacht..

Fast überall in der DDR konnte man Westfernsehen und -radio empfangen. Bis auf die Gegend um Dresden, die deswegen auch das „Tal der Ahnungslosen“ im Volksmund hieß. Das ist in Korea völlig anders. Man weiß voneinander offenbar sehr wenig.

Dies sind elementare Unterschiede zwischen Korea und Deutschland.

Der viel stärkere Unterschied im wirtschaftlichen Bereich und im Wohlstand erfordert sicherlich im Falle einer Wiedervereinigung erheblich größere Anstrengungen als bei der Wiedervereinigung beider deutscher Staaten.

Ob die Tatsache, dass die Menschen beider koreanischer Länder sich weniger kennen als das im Falle Deutschlands der Fall gewesen ist, eine größere Schwierigkeit für einen erfolgreichen Verlauf einer Wiedervereinigung bedeutet, vermag ich nicht zu beurteilen.

Vielleicht macht auch die Tatsache, dass die Menschen in Nordkorea in viel strengerem und ärmeren Verhältnissen leben, als damals die Menschen in der ehemaligen DDR gelebt haben, und die Tatsache, dass der Abstand zu Südkorea viel größer ist als der, der zwischen der DDR und der BRD war, eine Wiedervereinigung sogar einfacher, weil ich mir überhaupt nicht vorstellen kann, dass man dem System in Nordkorea selbst im Nachhinein irgendetwas Positives

abgewinnen kann.

Bezüglich der Wiedervereinigung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kann ich für meine Person auf die vorhin gestellte Frage, was hätte man anders machen können, damit die Wiedervereinigung besser gelingt, nur sagen:

Die Wiedervereinigung ist gelungen, man hätte nicht viel anders machen können, weil man sowieso nicht alles richtig machen kann.

Die Wiedervereinigung ist ein Glücksfall in der Deutschen Geschichte und eine Gelegenheit, die Helmut Kohl zur rechten Zeit erkannt hat.

Ich wünsche Ihnen, dass Süd- und Nordkorea Ähnliches zu Teil wird.

Haben Sie vielen Dank für Ihre Aufmerksamkeit und Geduld.

Session 2

“북한에서 정치사상교육의 의미”

현인애 박사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원, 북한청진의대 졸,
이화여대 북한학박사)**

북한에서 정치사상교육의 의미

현인애(통일연구원)

1. 들어가며

인간은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다.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은 포괄범위가 매우 넓다. 그 가운데서 인간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교육환경과 가정환경이다. 사회화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태어나서부터 15~20살까지의 기간이다. 그러므로 북한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특히 정치사상교육에 큰 힘을 넣고 있다.

특히 김정은이 얼마 전 진행된 군사교육일꾼대회에서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할 데 대해 다시금 강조하는 등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부에서 보면 북한의 정치사상교육은 허황되고 현실과 동떨어진 실효성이 없는 교육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사상교육의 위력은 매우 크다. 수십만 주민이 아사하고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조차 없는 상황에서도 북한체제가 건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은 북한당국이 주민들을 그 체제에 맞는 인간으로 만들어낸 데 있다. 그러한 교육에 의해 만들어진 북한주민들은 북한의 독특한 사회 환경을 이루며 그 속에서 태어난 어린이들은 다시 그 환경에 의해 길들여진다. 즉 체제순종적인 북한주민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북한당국의 정치사상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도에 대해 조명해보려고 한다. 이는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행동을 이해하고 통일이후 사회통합의 방도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2. 북한 정치사상교육의 목적과 내용

북한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학생들을 체제순응적인 인간,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체질화한 인간으로 만드는데 있다. 그를 위한 수단은 정치사상교육이다. 북한에서 교육강령으로 되고 있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사회주의교육에서 기본은 사상교육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회주의교육은 마땅히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사상혁명과정으로 되어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에서는 사상교육에 기본을 두어야 하며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교육조건과 수단은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데 복종되어야 한다.¹⁾

‘사회주의교육에 대한 테제’에서는 사상교양의 내용으로 주체사상교양,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교양,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교양 등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정치사상교육의 내용을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으로 수정했다.²⁾

1)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김일성저작집』 32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86) p.375

2) 2014년 7월에는 4대 교양이었는데 12월 30일부터 위대성교양이 첨부되어 5대 교양으로 정식화 되었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위대성교양은 수령의 사상과 영도, 품모의 위대성을 체득하고 수령에게 끝없이 충성하도록 하는 교양이다. 북한에서는 위대성교양은 사상 사업에서 기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최고 정화’로서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³⁾ 이를 위한 교양사업을 김정일애국주의교양으로 정의하고 있다.

신념교양은 학생들에게 북한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 공산주의 앞날의 휘황한 전망을 똑똑히 알려주어 그들이 승리를 굳게 믿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바쳐 투쟁하도록 하는 교양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자기 위업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계급교양은 학생들을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 계급을 미워하는 사상으로 무장시켜 그들이 계급적 원수들과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는 교양이다. 최근 북한은 계급교양에 많은 관심을 돌리고 있는데 미국, 남한과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으며 끝까지 싸우도록 하는 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덕교양은 학생들이 낡은 도덕관념과 생활인습을 철저히 없애고 도덕규범을 지키며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맞게 혁명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교양이다. 최근 북한이 도덕교양에서 강조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상 문화적 침투를 막는 것이다.

북한이 강조하는 5대 교양에서 핵으로 되는 것은 위대성교양이다.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은 위대성교양에 복종된다.

3. 북한 정치사상교육의 현황

가. 교과목을 통한 정치사상교육

북한의 정치사상교육 교과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혁명역사이다. 혁명역사학습의 목적은 수령의 위대성을 체득하고 충성심을 가지도록 하는데 있다. 북한 혁명역사 교과서 서문에는 “학생들 모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과목학습을 깊이있게 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잘 알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며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현명한 령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 완성할 참된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⁴⁾

북한교육에서 정치사상과목의 비중은 매우 높다. 북한 소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사상 및 도덕 교육은 과목수로 보면 30%이상 교수시간으로 보면 16%를 차지한다.⁵⁾ 북한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사상 및 도덕과목은 과목 수로는 24%, 시간 수로는 14%를 차지한다.

2015년 신년사에서 5대 교양을 강조했고 2015년 1월 9일 노동신문에서는 사설 “5대교양은 올해 사상공세의 중요한 임무”을 발표했다.

3) 김정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고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 2012.7.26

4)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초급중학교 1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3.8) p.3

5) 통일 교육원, “2007 북한이해” (양동문화사, 2007), p. 201

<표 1> 북한 정치사상교양 교과목

과목	탁아소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고 등 학 교	대 학 전 문 학교	직 장
김일성어린시절							
김정일어린시절							
김정숙어린시절							
김일성혁명활동							
김정일혁명활동							
김일성혁명역사							
김정일혁명역사							
김정숙혁명역사							
김일성김정일노작							
주체철학							
주체정치경제학							
김일성주의기본							
조국통일 및 남조선문제							
사회주의헌법							

출처: 필자 작성

북한은 정치사상과목 교과목 뿐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정치사상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소학교의 국어는 언어를 배워주는 과목이지만 교재내용은 사상교육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학교 국어 교과서의 주제별 단원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김일성의 가족을 칭송하는 단원 45.5%, 계급투쟁, 혁명의식을 고취하는 단원 17.7%, 공산주의도덕교육 36.8%로 구성되어 있다.⁶⁾

저는 소년단 조직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언제나 조직에 의거하여 생활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에서 맡겨 주는 일을 어김없이 실천하고 소년단모임에 빠짐없이 참가하며 소년단 규약을 잘 지킵니다. 저는 잃게 소년단 조직생활을 잘해서 자신을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참된 소년근위대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겠습니다.⁷⁾

누나가 하나하나 이야기 합니다. 구호나무를 가리키며 이야기 합니다. 광명성 탄생을, 조선아 자랑하자, 3대 통운 만세.⁸⁾

음악에서 취급하는 노래의 가사도 사상교양에 기여하도록 편성되어 있다. 소학교 음악교과서의 가사내용을 주제별로 보면 김일성 김정일, 그 가계를 칭송하는 가사가 66%, 적들에 대한 증오심을 고취하는 가사가 15%, 사회주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가사가 11%, 기타 19%로 나타났다.⁹⁾

6) 이은영, '북한 인민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정치사상교육 내용의 변화 분석',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2

7) 인민학교, "국어 3학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0), p. 143

8) 인민학교, "국어 1학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0), p. 41

9) 통일원, "북한 교과서 분석" (통일원 정보 분석실, 1992), p. 35

원수님 초상화

아침마다 교실에 들어설 때면 원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셔요. 우리들은 고개 숙여 인사드리며 원수님의 넓은 품에 모두 안겨요. 제일 좋고 훌륭한 것들을 원수님은 선참을 보내주셔요. 우리들은 공화국의 꽃봉오리들 원수님의 사랑 속에 자라나지요. 우리 모두 셋별논 반짝이면서 원수님의 초상화를 우러러봐요. 최우등생 높은 자랑 가슴에 안고 김일성 원수님께 인사드려요.¹⁰⁾

마찬가지로 중학교 1-3학년 국어교과서는 총 75개 단원 중 김일성 우상화 단원이 16개(21.3%), 김일성 우상화 단원이 9개(12.0%), 김일성가계선전 단원이 7개(9.3%)로서 김일성 부자 우상화 단원이 전체의 4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계급의식교양, 공산주의교양 등을 포함하는 정치사상성 주제 단원은 22개 단원(29.4%), 이며 언어생활에 관한 단원은 21개(28%)로 편성되어 있다. 결국 국어교과서가 포함하고 있는 사상교양 내용은 72%로, 거의 사상교양 과목에 가깝게 내용이 편성되어 있다.¹¹⁾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 1-3학년의 노래 총 수는 58개인데 김부장 우상화 노래 30개 반미, 일 적개심 노래 2개, 혁명과 충성선동 노래 20개, 순수 음악 4개, 기타 2개로 편성되어 있다. 다른 과목도 역시 사상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학제를 12년제로 바꾸면서 2013년 교과서를 전면 개정했다. 교과서는 이전과 달리 서방의 방식을 도입해서 재미있고 알기 쉽게 편집했지만 위대성교양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특히 김정일의 위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새 품종의 잔디밭이 수많이 조성되고 있다. 1정보의 잔디밭에서 매일 600kg의 산소가 나온다고 할 때 몇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산소량인가 사람은 하루에 약 0.8kg의 산소를 마신다.¹²⁾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이 깃든 개선헌년공원에 있는 급강하탑을 그림 1-38에 보여주고 있다. 급강하높이는 48m이다. 떠나서 절반 높이만큼 올라갈 때는 24.5m/s^2 의 가속도로 등가속 직선운동을 하고 나머지 높이는 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등감속직선운동을 한다. 떠나서 최고높이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인가 ¹³⁾

개정된 물리교과서도 매 장 첫머리에 김정일 또는 김정은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내용에도 수령의 위대성을 반영하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운반로켓 은하-3으로 실험위성 광명성 -3호 2호기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선군조선의 국력 우주강국의 존엄과 위력을 온 세상에 떨치었다.¹⁴⁾

10) 인민학교, “음악 1학년”, 16과 (평양; 교육도서 출판사, 1992)

11) 고세연, ‘북한 고등중학교에서의 김일성부자 우상화교육실태 분석’, 숭실대 석사논문, 1997, p. 52.

12) 초급중학교 『수학1학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3.8) p.68

13) 위와 같은 책, pp. 31~32

14) 『물리 초급중학교 1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3. 8) p.116

나. 실천을 통한 정치사상교육

1) 초상화, 동상을 통한 신성화

상징은 사람들을 세뇌하는 효과적 수단이다. 북한교육에서는 상징적 수단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모든 방에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거는 것을 의무화하며 초상화나 동상을 항상 정중히 관리하도록 통제한다. 그리고 그를 목숨으로 지켰을 때는 표창하고 온 나라에 알리며 못쓰게 만들면 엄중하게 처벌한다.

2012년 6월 11일 함경남도 신흥군의 한 시골학교인 인풍중학교 4학년 학생인 14살 한현경은 산사태로 위급한 상황에서도 초상화를 비닐에 감싸다가 사태에 묻혀 사망했다. 북한에서는 그의 사후에 김정일청년영예상을 어머니와 교장에게는 국기훈장 1급을 아버지와 부교장에게는 노력훈장을 담임교원은 공훈교원, 학교의 청년동맹 소년단 책임지도원과 소년단 지도원에게는 국기훈장 2급과 3급을 수여했다.

2) 답사, 견학을 통한 정치사상교육

북한에서는 수령의 위대성을 선전하기 위해 평양에는 조선혁명박물관과 주체사상탑, 개선문, 각 도에는 혁명사적관 혁명전적지 등 교양장소를 꾸려놓고 청소년들이 답사와 견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만경대 견학, 배움의 천리길 답사, 장자산혁명사적지 답사, 백두산 혁명전적지 답사, 혁명박물관 혁명사적지 관람 등을 통하여 수령의 혁명역사를 체험하며 그 과정에 수령의 업적을 배우고 존경심을 키운다.

3) 조직생활을 통한 정치사상교육

정치사상교육은 조직생활을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의무적으로 망라되어야 하는 소년단, 청년동맹의 가입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고려되는 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가입을 위한 심의에서 정치사상에 대한 학습 정도는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된다. 또한 소년단과 청년동맹을 통해 진행되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나 각종 표창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다. 또한 조직에서는 교과목과 별도로 독보, 덕성연구발표, 수령의 연구실 학습 등 수령의 위대성을 따라 배우기 위한 학습을 조직한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에 잘 참가하지 않거나 수령에게 불충실한 요소는 생활총화에서 비판하는 방법으로 제재를 준다.

4) 가정교육과 사회교육

북한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은 가정도 함께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의 정치사상과 관련 과오는 부모가 책임진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식들의 정치성향에 대한 단속을 무섭게 하고 있다. 부모들은 수령과 제도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절대로 자식들 앞에서 내색하지 않는다. 애들이 영향을 받아 무분별하게 행동해서 자식은 물론 가족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내세우기 위해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표시하도록 도와주고 칭찬해주며 잘못했을 때는 혼을 내준다.

북한의 사회적 환경도 정치사상교육에 복종된다. TV, 신문, 방송, 영화 등 모든 미디어와 영화는 수령의 위대성과 수령에게 충성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것을 매일 반복해보면서 청소년들은 철저히 세뇌 당한다. 대중미디어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다.

2015.12. 1. TV방송프로그램

09:11 위대한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 사랑이 응축된 기념비적창조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 보시였다

09:26 <조선기록영화> 조국광복을 위하여(12) (2013.12.1 재방)

10:15 <수필> 우리 장군님의 기쁨

10:28 <련속참관기> 위인칭송의 보물고- 국제친선전람관을 찾아서(357) -

10:39 <과학영화> 온실남새재배에서의 환경관리

11:09 <혁명가극감상>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전장)

14:07 ?김정은, 새로 개건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현지도 (여멘트, 정사진 2회)

14:21 <방문기> 자력갱생으로 흥하는 산골군- 우시군 -

14:37 <조선기록영화> 순결한 량심을 조국에 바친 지식인들 (2014.5.20 재방)

15:11 <특집> 위인을 모시여 빛나는 민족사-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의 60년사를 더듬으며 -

15:28 명량한 텔레비존무대

16:06 <조선예술영화> 분조의 주인 (2014.6.21 재방)

17:00 김정은, 새로 개건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현지도

17:17 오늘 호 중앙신문개관

17:34 <아동방송시간> 록화실황 : 제26차 전국아동음악방송예술무대

18:05 <현지방송> 청년돌격정신이 내려친다-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전투장에서 -

18:13 <련속소개 편집물>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 -

18:41 <조선기록영화> 강원 땅의 위대한 전변을 마련하시여 (2014.12.1 재방)

19:39 <현지방송> 동해어장에 내려치는 결사관철의 정신

20:00 김정은, 새로 개건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현지도

20:10 보 도

21:07 <텔레비존련속극> 수평선(제4부) (2015.1.19 재방)

21:29 <록화실황> 제15차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대학생부류)- 독창종목 결승2조 -

22:22 김정은, 새로 개건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현지도 15)

15) 북한정보포털 북한TV프로그램 편성표 nkinfo.unikorea.go.kr 검색일 2015년 12월 1일

보여주는 것처럼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모두 수령의 위대성을 선전하거나 수령께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로 편성되어 있다.

다. 일생동안 반복되는 정치사상교육

북한에서는 정치사상교육은 일생동안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람들의 사상의식 발전과정은 그들의 성장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치사상 교양은 낮은 나이로부터 높은 나이로, 낮은 교육단계로부터 높은 교육단계로 올라가면서 점차 심화시켜야 한다.

유치원교육에서 어린이들에게 사회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표상을 주고 정치사상의식을 싹틔워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람들이 성장하고 교육단계가 높아지는데 따라 점차 사회현상의 본질과 원리를 깊이 인식시키도록 사상교양을 심화시키며 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 16)

탁아소의 교육내용에는 수령우상화와 반미반한감정으로 고취시키는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유육과정에는 김일성 김정일 어린시절 과목이 있다. 소학교 교과에도 김일성 김정일 어린 시절 김정숙어린시절이 있다. 중학교에는 김일성, 김정일, 혁명활동, 고등학교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혁명역사 과목이 있다. 대학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혁명역사와 김일성김정일노작 등 정치사상과목이 늘어난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노동자 농민 사무원 군인들은 간부학습반, 노동자학습반에서 정치학습을 해야한다. 정치학습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혁명역사와 노작 위조로 학습한다.

4. 정치사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도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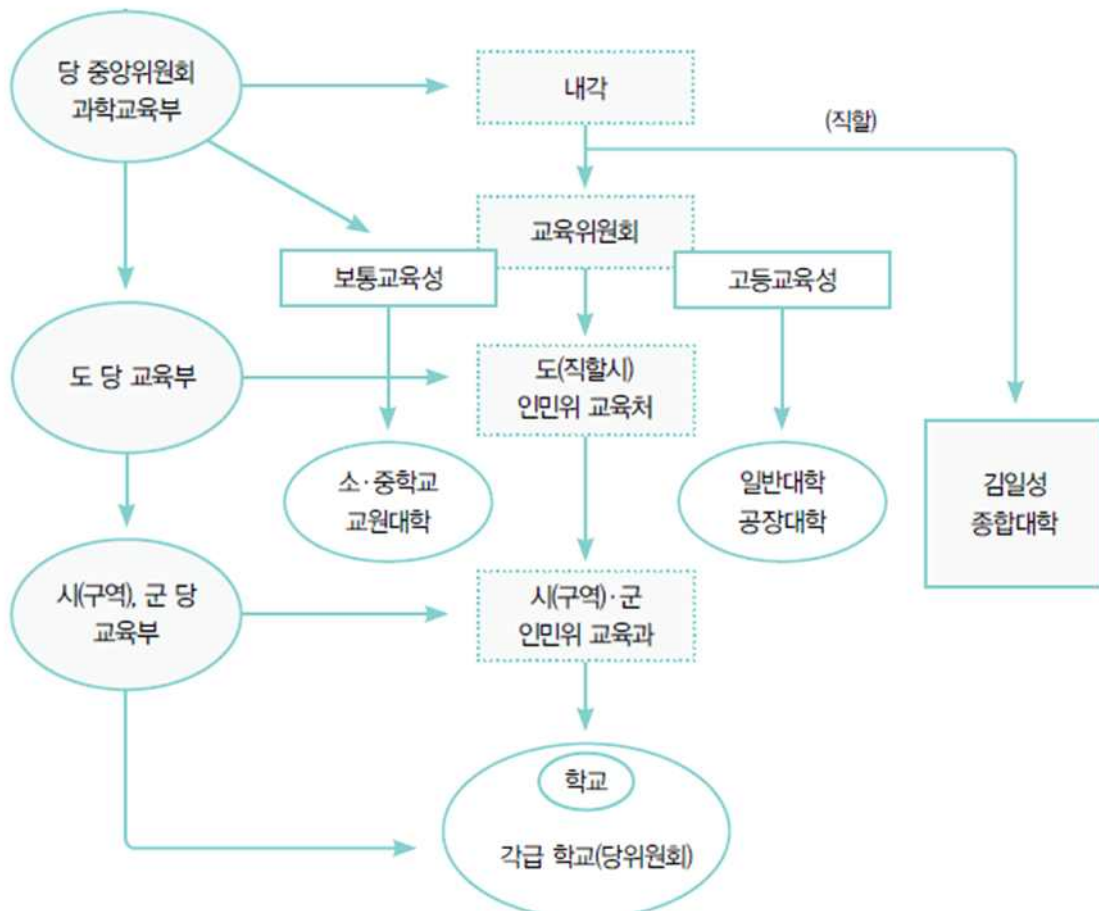
가. 국가의 지도통제 체계

북한에는 당과 국가가 관할하는 공교육만이 존재한다. 조선노동당 과학교육부는 수령의 의도를 반영하여 교육 정책을 수립하며 그 집행을 감독 통제한다. 각도, 시, 군 당위원회에는 교육부서가 있으며 자기 관할구역 내의 교육기관 당조직을 통제한다.

내각 교육위원회는 각급교육기관의 정치사상교육 과정을 만들고 교수내용을 만들어 학교에 하달하며 그 집행을 감독 통제한다. 도, 시, 군 행정위원회 교육과는 해당지역 교육기관의 교육실무를 책임지고 집행한다. 각 급 학교 당위원회는 교수 교사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도록 당적으로 통제하며 학교행정은 실무적 집행을 책임진다.

16)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김일성저작집』 32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86) p.398

<그림 1> 북한의 교육지도체계



출처: 통일교육원 『2014 북한이해』 p.235

나. 교사의 역할 강조

북한은 교사들이 정치사상교양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높일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정치사상과목 담당 교수, 교사들은 위에서 하달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정확히 철저히 전달해야 하며 그 과정에 과실이 나타나면 처벌을 받는다. 교사들은 담당과목에 관계없이 5대 교양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연구해야 하며 실제 교수사업에서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양을 얼마나 잘했는가 하는 것은 교사의 활동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된다.

북한 교원선전수첩에는 교수에서 현실자료를 이용하여 당정책화를 실현하며 학교 연혁을 통한 교양 위대성 자료를 통한 교양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하여 정치사상교육을 진행한 예가 소개되고 있다.

다. 통제와 처벌

북한은 정치적 이단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하다.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진다. 1970년대 초 철없는 아이가 초상화를 훼손해서 가족이 정치범수용소로 간 예도 있다. 지금은 초상화훼손과 관련한 처벌이 좀 약해졌지만 그래도 과실로 초상화를 훼손하면 3~4년 교화형을 받는다.

최근 외부정보의 유입을 막기 위해 그와 관련한 형법조항을 만들고 강한 법적 처벌을 하고 있다. 북한정부는 어린이들이 국가에서 승인한 책, 영화 외의 것 특히 남한의 미디어를 시청했을 경우에는 부모가 연대적 책임을 진다. 강한 통제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청소년들이 국가가 주입하는 이데올로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도록 압박한다.

5. 북한 정치사상교육의 특징

가. 왜곡되고 편향된 교육

북한의 정치사상교육 내용은 왜곡되고 부풀려진 것이 특징이다. 김일성의 항일혁명사나 6.25전쟁, 이후 국가건설에서의 성과 등 상당한 내용이 현실을 왜곡한 것이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을 조직, 조국광복회조직, 민생단 투쟁 등 많은 내용이 오도되었고 항일투쟁시기 다른 사람들의 업적을 모두 김일성의 업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조국해방도 김일성항일빨치산에 의해 달성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도 6.25전쟁을 남한이 일으켰다고 하고 있으며 전쟁 시기 중공군의 역할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전후 반종파운동, 등 왜곡된 내용이 너무 많아 일일이 지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학생들이 접하고 있는 현실조차 왜곡하고 있다. 또한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법은 “우리 삶의 요람인 사회주의제도를 지켜준다. 우선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전취물을 해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괴뢰역적패당들 우리내부에 숨어있는 불순적대분자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을 무자비하게 징벌한다. 사회주의 법은 또한 낡은 사상 잔재로 하여 나타나는 온갖 위법행위를 미리 막는데서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⁷⁾

나. 과격하고 극단적인 증오사상을 고취

고급중학교 1학년 도덕 제4장은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자”이며 여기에서는 제1절 우리생활과 계급투쟁, 제2절 우리의 원수들과는 반드시 끝장을 보아야 한다, 제3절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철저히 짓부시자로 구성하고 그 내용은 학생들이 원수에 대한 증오사상을 가지도록 구성했다.¹⁸⁾

이와 같은 증오사상은 소학교 교과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꼬마땅크 나간다.

꼬마땅크 나간다. 우리 땅크 나간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달려 나간다. 미제놈들 쳐부수며 만세만세 공화국기 휘날리며 만세만세.

꼬마땅크 나간다. 우리 땅크 나간다. 덤버드는 미국놈들 깔아 눌렀다. 남녘땅 동무들아 만세만세 원수님 품에 안겨 만세 만세.¹⁹⁾

북한교과서에서는 법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현실을 미화하고 있다. 법은 “우리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준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도, 전반적 무상치료제도, 국가 부담에 의한 어린이보육교양제도, 국가자금으로 살림집을 지어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배정해 주는 제

17) 『사회주의도덕 고급중학교 1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3. 8) p.111

18) 『사회주의도덕 고급중학교 1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3. 8) p.111

19) 인민학교, 『음악 1학년』, 1(평양; 교육도서 출판사, 1992)

도, 세금의 완전한 폐지와 같은 인민적 시책들은 보통교육법, 인민보건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살림집법 등 사회주의 법에 의하여 실현되고 있다.“²⁰⁾ 북한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설명이지만 학생들은 이러한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세뇌된다.

다. 강도 높은 정치사상교육

북한의 정치사상교육은 다른 사회주의나라와 비교해 볼 때도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독특하다. 정치사상교육의 내용의 왜곡정도, 정치사상교육의 비중, 기간, 통제수위 등 모든 면에서 강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6. 나오며

국제적 환경과 북한이 처한 정치경제적 난관은 청소년의 정치사상의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 북한 청소년들의 정치사상의식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그의 반영으로 사상교양내용이 미래사회에 살기 위한 인성 준비로서 강조되었지만 오늘에 와서는 “모기장이론”과 같이 체제 방어수단으로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정치사상교양방법으로써 해설과 설복보다는 통제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치사상교육의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금물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람의 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환경이다. 북한의 환경이 자본주의화되고 있지만 지금 북한을 지배하는 것은 김씨 일가의 정치시스템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의식에서 기본으로 되고 있는 것은 국가가 주장하는 사상이다. 남북이 통일되는 경우 이러한 의식을 가진 청소년들을 어떻게 교육 교양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통일후 북한청소년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육의 준비가 필요하다.

20) 『사회주의도덕 고급중학교 1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3. 8) pp.112~114

참고문헌

고세연, ‘북한 고등중학교에서의 김일성부자 우상화교육실태 분석’, 송실대 석사논문, 1997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김일성저작집』 32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86)

김정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고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 2012.7.26.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초급중학교 1학년용』 (교육도서출판사 2013.8)

『물리 초급중학교 1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3. 8)

『사회주의도덕 고급중학교 1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3. 8)

인민학교, “국어 3학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0),

인민학교, “국어 1학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0)

인민학교, “음악 1학년”, 16과 (평양; 교육도서 출판사, 1992)

이은영, ‘북한 인민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정치사상교육 내용의 변화 분석’,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2

초급중학교 『수학1학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3.

통일 교육원, “2007 북한이해” (양동문화사, 2007)

통일원, “북한 교과서 분석” (통일원 정보 분석실, 1992)

로동신문

북한정보포털 북한TV프로그램 편성표 nkinfo.unikorea.go.kr

Session 3

**“정치사상교육을 받은
북한주민의 특이성과 통일준비 방안”**

정은찬 교수

(통일교육원, 북한원산경제대학 교수)

정치사상교육을 받은 북한주민의 특이성과 통일준비 방안

정은찬(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발표 목차

- I. 서론-북한 정치사상교육 목적(간단언급: 1세션 참조)
- II. 정치사상교육을 받은 북한주민의 의식의 특징(복종과 두려움)
- III. 경제난 이후 북한주민 의식변화(사상이반 및 외부세계 동경)와 한계
- IV. 통일 후 예상되는 정치사상교육의 폐해(북한주민 의식 발현 유형)
- V. 결론- 통일 후 남북한 통합을 위한 과제(정치사상교과 폐지와 폐해 극복)

I. 서론 - 북한 정치사상교육의 목적

- ☐ 일반적으로 가치관이란,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어떤 대상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 및 의식에 관한 견해와 입장. 의식은 개인이나 일정한 사회, 국민이 가진 의식의 뒀뒀이를 의미함. 의식은 어떤 사회체제 하에서 어떤 교육을 받으며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 그 형성 및 고착, 잠재의식 속에 내면화된 행태가 다르게 나타남.
- ☐ 70여년 가까이 권력세습을 단행해 온 북한은 1인 유일독재를 위해 3대에 걸쳐 북한주민 의식을 변형시켜 인간본연의 자율적 속성을 말살해 왔음. 이 과정에 조기교육단계에서부터 지도자에 대한 신격신조화 교육, 정치사상교육이 강행됨.
- ☐ 북한 정치사상교육의 목적은 최고지도자와 체제에 맞는 새로운 인간형을 창조한다는 데 있음. 즉 ‘주체형의 새(新)인간’²¹⁾으로 만드는 것. 이 과정은 주입식 교육(학교·사회·가정)단계와 교육효과 검증(충실성, 집단주의 발현)단계를 병행²²⁾.
(이 부분은 먼저 발표한 현인에 박사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중복 관련 생략)
- ☐ 수동적 객체로 살아가야 하는 북한 현실에서 정치사상교육에 의해 잘못 형성된 북한주민 내면화된 의식은 무엇이며, 주민들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을까? 그들에게 항거 DNA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통일 후 통합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 본 발표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데 중점을 두고 내용을 전개하려고 함.

21) ‘주체형의 새 인간’이란 (1)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철저히 무장하고 충실성이 검비된 인간, (2)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적 집단이익을 중시하며, (3) 혁명적 낙관주의 정신을 검비하고, (4) 대중동원운동 및 사회적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간을 의미. 북한 내에서는 일명 주체형의 피가 흐르는 인간으로 묘사됨.

22) 북한체제는 제도화된 목표와 규범에 맞게 북한주민의 자율적 속성이 변형되도록 어려서부터 정치사상교육을 강행, 동시에 체제에 동조할 수 있는 가치체제와 정치적 자아가 형성되도록 조직적 물리적 통제를 병행함.

II. 정치사상교육을 받은 북한주민 내면화된 의식

1. 정치사상교육에 의해 내면화된 충성(복종)의식

- 북한체제는 주민 가치관과 의식을 정치사상교육을 통해 지도자와 체제에 맞게 변형시켜
옴. 이 과정에 충성(복종)의식 고취되며 구체적 과정은 아래와 같음.
- 우선, 초기교육단계에서의 우상화교육 강화→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지도자가 베풀어주는 은혜에 감사하도록 교육⇒ 절대적 존재로 뇌리 속에 각인
 - 다음, 가치관 및 세계관 형성시기 정치사상교육 강화→ 주체사상교육을 비롯한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신뢰의식 함양, 3관 및 3위1체론·사회주의대가정론 교육을 통한 충성 및 복종 의식 확립
 - 성인이 된 이후에도 주기적인 정치사상이념학습 시행



- ① 주체사상 본질에 대한 교육교양: 주체사상의 창시자인 김일성은 맑스-레닌보다 더 위대한 탁월한 사상이론가, 위대한 수령임을 부각, 주체사상의 위대성을 배우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평양을 방문하고 있음을 강조. 김정일 통치시기에는 김일성주의 교육을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김일성·김정일주의 교육을 병행시키고 있음.
- ② 3관 수립: 혁명적 수령관, 혁명적 조직관, 혁명적 인생관 수립을 강조한 것으로서 1960년대 북한체제 내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제시와 함께 등장 → 보편적 3관(가치관·인생관·세계관)수립을 변형.
- ③ ‘신체(身體)일체론’을 이용한 ‘3위1체론(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수령·당·대중의 통일체’
: 기원- 1960년대 3관 수립(혁명적 수령관, 혁명적 조직관, 혁명적 인생관)이, 1986년 김정일에 의해 ‘3위 1체론’으로 승화
: 인간의 육체에 비유하여 뇌수는 수령, 중추는 당, 각 지체는 대중⇒ 북한 사회를 하나의 사회생명체로 보았을 때, 최고뇌수인 수령을 옹호보위, 그를 중심으로 한 일심단결을 강조한 것
- ④ ‘혈연(血緣)일체론’을 이용한 사회주의 대가정론
: 북한에는 두 개의 가정이 존재→ 하나는 혈연으로 이루어진 일반 가정, 다른 하나는 북한사회를 하나의 큰 가정으로 본 사회주의대가정
: 사회주의 대가정 구성원: 부(父), 모(母), 자녀(子女)
: 사회세포를 이루는 일반적 가정인 부(父)·모(母)·자녀(子女)에 비유하여 북한사회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묘사. 즉 부(父)=수령, 모(母)=당, 자녀(子女)=대중. 결국 부(父), 모(母)가 있어야 자녀도 존재할 수 있음을 강조

⇒ 북한사회의 대가정 속에서 수령과 당이 건재하지 않으면 자녀인 대중도 존재할 수 없음을 강조, 아버지인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부각시킨 것.

- 북한체제의 정치사상교육에 의해 내면화된 북한주민 충성(복종)의식은 자율적인 가치관 확립과 자기인생과 사회현상 및 주변세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 없도록 저해. ‘정저지와(井底之蛙)’식 사고에 갇힌 인생을 살게함.

2. 정치사상통제에 의해 내면화된 두려움(공포)의식

- 북한체제는 정치사상교육을 통해 주입된 충성(복종)의식이 실생활에서 발현되도록 정치사상통제(‘3·4·3 통제기제’의 작동)를 강행. 이 과정에 북한주민 의식 속에 징계에 대한 두려움(공포)의식이 내면화되게 됨. 그 과정은 아래와 같음.

- ‘3·4·3 통제기제’는 3계층 출신성분 규정→ 4단계 사상생활통제→ 3중 규제’를 의미. 북한체제의 정치사상적 주민통제기제임.

- 3계층 출신성분 규정: ‘종파숙청’사건(1956.8)이후 1960년대 말~1970년대 초 주민등록조사를 통해 3계층 51개 부류의 정치적 계층이 분류됨

: 3계층: 핵심계층, 기본계층, 복잡계층

: 51개 부류는 3계층을 다시 분할하여 세부화시킨 것

: 계층에 따라 교육혜택(대학입학), 직업배치, 국가공급(분배)에서 차별 실시

- 4단계 사상생활통제: 선전선동 및 사상교육 참여, 정치조직생활 참여, 경제사회생활에서의 충실성 발현, 위의 3단계 불시행시 법적 징계



- ① 선전선동 및 사상교육 참여 통제→ 수령제일주의 및 정치의식 고취

: 어려서부터 수령 신격화 교육(학교, 가정, 사회교육 병행)

: 사적지, 박물관, 동상을 통한 우상화(神政政治 토대 구축)

: 매월 2차 강연회, 매주 토요일정치학습, 상·하반기 학습총화 등 평생학습

: 충실성 검증 통해 신분 승격(초상화 보위, 현장 순직 등)

- ② 의무적 정치조직 가입 및 정치생활 참여 통제

: 만 7세 이상 의무적 조직가입·정치조직생활 참여 강요

: 매주 소속된 정치조직에 의거, 조직생활총화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자기비판과 상호비판 진행)

③ 경제생활 및 가정생활에서 충실성 실천 통제

- : 만 17세 이상 생산노동능력 보유자에 한하여 국가에서 의무적 직업배치. 직장에 출근하여 지도자 초상화보위, 생산현장에 결사옹위 정신 실천 등
- : 직장 노동생활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을 지도자와 체제에 대한 충실성과 연관시켜 정치사상적으로 통제→ 전국적인 출근보고 집계, 결근 일수에 따른 식량공급·생활비(월급)지급 규제
- : 물질소비생활에서의 수입 대 지출 감독 및 통제.
- : 대중운동(마식령속도창조운동, 조선속도창조운동 등), 건설현장(평양 창전거리, 백두산청년영웅발전소 등) 자율적 지원→ 술선수범(이신작척 모범) 대상자에 한하여 표창
- : 퇴근 후 인민반을 통한 가정생활에서의 충실성 발현 여부 통제→ 인민반장, 세대주 반장을 통한 가정별 사상동향·생활수준·이동사항 수시로 감시보고가 되며, 가정 내에서 충성의식 고취와 위배되는 현상 적발-징계

④ 법적 징계를 통한 정치사상통제→ 정치범죄자를 구분

- : 위의 3단계에 불복종, 불성실하였을 경우 법적 규정을 내세워 처벌
- : 정치적 발언(지도자에 대한 불신 등), 반체제행위에 대해 정치범죄자로 낙인- 특별 독재대상구역(정치범수용소)에 감금. 반정부 음모 가담자에 한하여 가족 연좌제 처벌(8촌까지)
- : 정치조직생활 기피자는 일반범죄로 구분하여 교도소, 강제노동단련대를 통해 징계함.

- 3중 규제를 통한 정치사상통제

- ① 당 조직부서(노동당과 그 외곽단체인 조선소년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을 통한 정치조직생활 규제)
- ② 치안부서(인민보안부를 통한 경제생활 및 가정생활 통제: 법 규정 준수사항, 거주상황, 생산노동 참여 및 물질소비생활 규제)
- ③ 정보부서(국가안전보위부를 통한 정치사상동향, 반정부음모 및 아래로부터의 시민 소요 적발⇒ 강력한 처벌 및 정치적으로 규제)

- ☐ 정치사상통제를 통해 내면화된 두려움(공포)의식은 항거 DNA를 마비시키고, 인간이 타고난 고유한 속성(감정표현, 사랑에 대한 관념)을 변질시킴. 대표적으로 북한의 정치조직생활총화 제도는 타인에 대한 견제 및 공격적 비판의식을 체질화시키고, 부정적 판단을 우선시하는 이질적 가치관을 형성하게 함.

III. 경제난 이후 북한주민 의식변화와 한계

1. 북한주민 의식변화의 요인

- ☐ 북한체제는 주민생활 영역을 정치, 경제, 문화생활로 분류하고 이 중 정치조직생활을 특별히 강조해 옴.
- 그 이유는 정치조직생활 강화가 주민의식변화 차단기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

- 이로부터 집단주의에 기초한 의무적인 정치조직생활(매주 토요일 생활총화 등) 참여는 정치사상교육과 함께 조직구성원 간 상호비판, 이를 위한 상호감시 및 통제를 동반해왔음.

□ 경제난 이후 북한주민 의식변화에는 3가지 추동요인이 작용. 1) 북한주민 자립적 생존방식 변화, 2) 시장화 현상에 의한 외부정보의 유입유통, 3) 사회통제기제의 작동과 현실 시행 과정의 괴리.

1) 북한주민 자립적 생존방식 변화

- 북한주민 자립적 생존방식은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로 생산부문 80%이상이 침체되고 국가공급 유명무실(有名無實)이 지속되면서 생존의 기로에서 주민 스스로 선택에 의해 출현. 이후 2000년대 들어 삶의 전반에 고착.
- 현재 북한주민 80%이상은 자생적 생존방식(장사, 소토지, 밀수, 고리대금업, 개인수공업 등)에 의해 생활 유지. 이는 문화행태변화를 촉구하고 정치의식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시장화 현상에 의한 외부정보의 유입유통

- 북한경제를 지탱시키는 기둥(mainstay)역할을 하고 있는 시장은 국가규제 하에 운영되었던 농민시장이 경제난 이후 자생적 암시장화(Black Market)되면서 자본주의 맹아가 싹트는 현장으로 변천. 2003년 북한정부의 시장포용정책에 의해 공설시장으로 공식 운영되면서 북한주민 생존 장터(marketplace)로 거듭남.
- 현재 북한의 시장은 사람·자본·재화·정보·문화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수단(매개체 instrument). 시장을 통해 외부정보가 빠르게 유입·유통되어 이를 통한 북한주민 외부세계 문화행태 모방 및 동경의식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
- 특히 국가생산부문 침체 장기화로 시장화가 촉진되고, 주민들 속에서 정보통신기기(핸드폰-손전화기 사용자 약 300만 명) 활용 및 탈북민을 통한 남한소식 유입, 중국을 통한 한국드라마 CD(알판) 유통이 활성화.
- 한국산 제품 선호도가 급상승하고 한국가요·미국팝송·디스코 등 외부 문물 선호현상이 날로 증대²³⁾→시장을 통한 북한주민 의식변화는 더욱 증폭
- 이러한 현상은 외부사조 유입에 의한 주변세계(한국, 중국 등)동경의식 증대와 외부 사회문화 풍조 모방을 추동하는 북한주민 의식 변화기제로 작용

3) 사회통제기제의 작동과 현실시행 과정의 괴리

- 자생적 생존방식 변화 및 고착, 시장화에 의한 외부정보 유입유통 확산에 의해 북한주민 의식이 지도자·체제 의존에서 개인·돈 중심으로 이전되게 되자 북한체제는 사회통제기제를 더욱 강력 작동⇒ 공안공포통치 강행
- 그러나 주민에 대한 사회통제 시행자인 중간 간부계층(도·시·군 단위 당 간부, 인민보안원, 안전보위원)은 경제생활 어려움, 가족생계유지를 위해 통제대상인 일반주민들과 협

23) 2014.5.12~15일까지 열린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에는 휴대용 메모리(32ga), 로봇청소기, 판형컴퓨터(태블릿 컴퓨터), 신발, 가방(캐리어 포함), 식품(강냉이 국수 등)들이 진열되었다.

력·결탁 ⇒ 뇌물수수, 부정부패를 생존수단으로 택함

: 일반주민 생존방식: 장사, 소토지(화전)²⁴⁾, 중국으로의 비법월경(밀수) 등

: 사회지도층 생존형태: 부정부패, 뇌물수수, 상인들과의 결탁 하에 이윤 창출

- 이 과정에 북한체제의 사회통제는 작동체제와 현실시행에서 괴리가 발생되어 자생적 생존을 위한 주민 사회적 이탈(직장 생산현장에서 이탈) 증대, 시장 의존도 및 외부세계 동경의식 증대로 이어지고 있음

- 경제난 이후 증가되고 있는 북한주민 의식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북한 사회변동을 아래로부터 추동할 긍정적 요인이지만, 북한주민 잠재의식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기에는 미비한 상태이며, 향후 더욱 촉진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2. 최근 확산되는 북한주민 의식변화 양상

- 북한체제의 정치사상교육을 통해 지도자에 대한 충성과 절대적 복종이 체질화, 생활화되어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살아야 할 북한주민 의식은 경제난 이후 자립적 생존에 직면하여 변화되기 시작.
- 북한주민 의식변화는 1) 개인주의·가족 중심 의식, 2) 배금주의 및 물질지상주의 지향, 3) 사상이반 및 외부세계 동경의식 고취를 통해 나타남.

1) 개인주의·가족 중심 의식 확산

- 경제난 이후 북한주민 의식은 수령제일주의, 집단주의 의식에서 개인·가족주의로 변화. 이는 국가공급제도의 유명무실에 의한 자립적 생존이 대두되면서 더욱 확산되기 시작함.
-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20여년 지속되어 온 경제위기로 북한주민 의식은 수령 및 체제의존, 수령제일주의, 집단주의 의식에서 이탈. 북한주민들 스스로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가치관과 수령제일주의를 지향한 사회생활 규범에서 이탈→ 사회주의 준법기풍 위반, 사회적 이탈을 추구
- 특히 자립적 생존을 통해 부(富)를 축적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의식이 팽배해지고, 시장을 통한 외부정보 접촉이 촉매제가 되어 개인주의 가치관 및 의식은 북한주민 삶의 영역에 고착되게 됨.
- 이러한 변화를 차단하기 위한 북한체제의 사회통제 강행으로 북한주민 의식변화는 확산과 위축의 과정을 겪고 있으나, 체제불신 및 지도자 불신은 부분적으로 승화되는 추세.
⇒ 이는 북한체제가 인위적으로 변형·고착시켜 놓은 의식의 틀에서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임.

2) 배금주의, 물질지상주의 의식 확산

-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우리 사회주의’, ‘모두가 평등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이는 북한체제가 주입한 제도적 자긍심. 그러나 현재 이러한 의식은 약화되고 있음→ 개인주의·물질선호주의 의식이 확산·고착

24) 7.1조치 이후 한 가구당 400~600평까지 경작권 허가, 소토지 암거래 등장, 현재 협동농장 발은 방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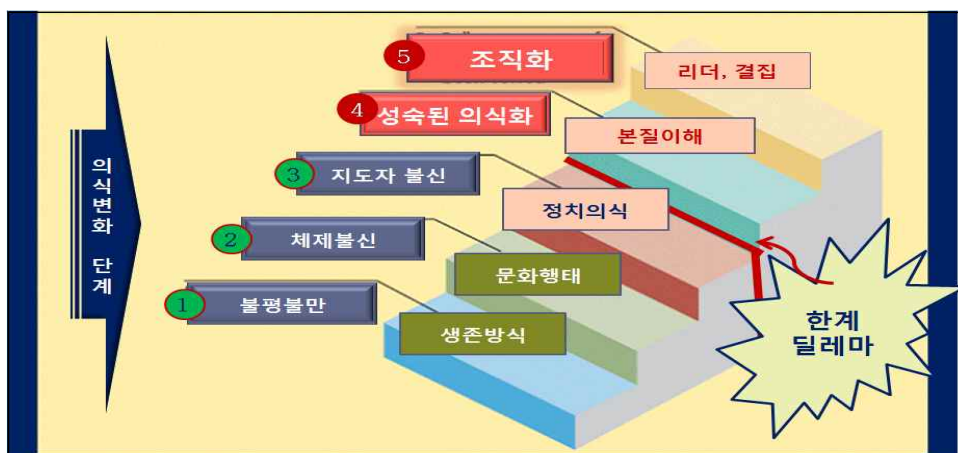
- 경제난 이후 고착되기 시작한 자생적 생존방식과 시장화 현상에 의한 외부정보 유입, 개인 수준에서 반복되는 부(富)의 편중현상은 북한주민 삶 속에서 배금주의를 비롯한 물질지상주의 등 자본주의 맹아가 확산되도록 추동
- 2000년대 들어(2009. 화폐개혁 이후) 부의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부의 축적을 위해 시장 상인과 권력층과의 협력 및 결탁이 가시화되면서 ‘돈’ 중시 의식은 더욱 확산.
- 공안통치를 시행해야 할 통제하는 계층의 일탈은 아래로부터의 무질서 보편화에 기여하고 북한사회 내부변동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돈’과 ‘뇌물’을 통해 출신성분을 교정하려는 욕구가 분출(시장을 통해 형성된 시장세력, 즉 신흥부자계층들 속에서 유발).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이 사회주의적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며 불신 표출→ 불평등 상황을 인지하고 적응해가고 있음(사회 저변에 확산되고 있는 북한 내 불평등 현상은 통일에 저해)

3) 사상이반 및 외부세계 동경의식 확산

- 경제적 자립의식이 고착된 북한주민의 경우 먹는 문제가 해결된 이후 문화행태 변화를 추구. 문화행태변화는 문화의식변화의 전제가 되며, 이 과정에 외부세계를 동경하는 의식 고취.
- 북한주민 외부세계 동경의식 고취는 한국, 미국 드라마와 영화의 내용(주인공 스타일, 시대적 배경) 모방에 국한되지 않고 북한체제와 다른 체제를 비교할 수 있는 판단기준 확립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정치의식 변화를 추동할 결정적 요인임.
- 북한체제는 주민들 속에서 확산되는 외부세계 동경의식을 차단하기 위해 시장 규제와 사회적 일탈에 대한 공안공포통치를 강행. 이 과정에서 북한주민 불신 표출이 심화됨.
- 북한주민 불신은 단순 불평불만을 넘어 체제불신 및 지도자불신으로 승화되고 있으며, 이는 사상이반을 동반. 특히 신세대(장마당세대)의 경우 경제난시기에 태어나 2000년대 들어 생존현장에 투입. 이러한 가정환경으로부터 정치사상교육에서 이탈되어 외부사조 유입을 통한 사상이반에 기성세대보다 빠르게 편입.

3. 북한주민 의식변화가 직면한 한계

- 북한주민 의식 변화는 수령제일주의 및 집단주의 기피, 배금주의 및 물질지상주의 중시, 외부세계 동경과 타 체제와의 비교를 통한 사상이반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변동 추동 요인으로 응집 못되는 한계 내재.
- 북한주민 의식변화의 5단계는 아래의 그림과 같음.



- 경제난 이후 단순 불평불만으로 시작된 의식변화는 현재 체제불신 및 지도자불신으로 승화되는 과정 속에 있음
- 1990년대 중반 4대 경제난(식량난, 원자재난, 에너지난, 외화난)이 주민 생존을 위협하였던 시기 발발된 불평불만은 의식변화의 시초가 되어 자생적 생존방식이 고착되어 가던 김정일 통치시대 들어 체제불신으로 증폭
 - 이후 김정은 체제 등장으로 공포통치가 더욱 심화되고 경제생활에서의 어려움 또한 가중되자 지도자 불신이 표출되기 시작. 그러나 그 수가 극소수의 북한주민에 국한되고 무엇보다 내재된 생각을 표출하지 못하는 한계 내재.
- 정치사상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도자 우상화와 체제 우월성 선전내용에 무관심하거나, 체제 선전보다 시장을 통해 유입·유통되는 외부사조(한·미 드라마, 음악, 영화)에 더욱 관심이 높은 현상은 증가하는 추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 의식변화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사회변동 집합체 형성은 어려운 현실.
- 북한주민 의식변화의 한계는 북한주민 자발적 힘에 의해 4단계와 5단계의 성숙된 의식화 및 조직화를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음.
- 이는 북한체제에 의해 변형되고 고착된 주민 의식이 자발적 깨어진 의식화를 제어하기 때문.
 - 이러한 한계는 정치사상교육을 통해 북한주민 자율적 속성이 말살된데서 비롯되며, 잠재 의식 속에 잔여해 있는 공포의식(불신을 표출했을 경우 받게 될 징계에 대한 두려움)과 연관됨. 또한 북한체제의 강력한 정치사상통제와 연관됨.
- : 김정은 체제는 북한사회 아래로부터의 주민 의식변화를 직시하여 외부사조 유입 차단을 사회통제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²⁵⁾
- : 2014년 2월 26일 제8차 사상일꾼대회 연설에서 김정은은 “텔레비존 화면을 통하여 생생적이고 이색적인 부르쥔아 문화, 생활악식에 오염된 이전 쏘련 등의 청년들이 변질되고 부패 타락하여 나중에는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데 앞장섰다.”등의 내용을 지적
- : 2014년 5월 16일 제9차 예술인대회에 보낸 서한에서는 “창작가, 예술가 등은 주체적 문예사상과 배치되는 무상상화, 날라리풍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
- 김정은 체제는 국정목표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주의 정치사상강국 건설’을 강조. 대표적으로 5대 교양을 강화할 것을 지시(위대성 교양,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 신념 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 내부결속 도모를 위한 북한 내 정치사상교육 및 정치사상통제는 향후에도 강화될 것임.

25)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2013.9.24)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배격해야 한다’의 내용 중 외부사조 유입 차단을 강조, 중동 민주화시위와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를 언급,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의 위험성과 후과를 똑바로 알고 맹아단계부터 철저히 짓부셔 버려야 할 것’이라며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 강조

IV. 통일 후 예상되는 정치사상교육의 피해²⁶⁾
- 인위적으로 형성된 북한주민 의식발현 유형 진단

1) 이중적 자아

- 감정 표출에서의 정례화된 표현(표면적)
 - : 인간의 7정 표현방식이 다른 체제에서 살았던 주민들과 다른 양상 나타냄
 - : 표면적 감정표현에서 가식과 진실에 대한 판단기준 경비 못하고 선례만 모방
- ‘나’ 안의 ‘나’ 숨기기, 외면적 ‘나’의 모습 외연화(거짓 자기화)
 - : 인간본연의 타고난 본성과 정치사상교육을 통해 변형된 인간형과의 갈등
 - : 체제의 정치사회화 과정 속에서 외연화된 ‘나’를 본연의 ‘나’로 착각. 이는 북한체제의 본질을 깨닫는 성숙된 의식화의 가장 큰 저해요인임.

2) 수동적 객체화 성향

- 3관(수령관, 조직관, 인생관), 3위1체, 대가정론 확립 영향으로 수동적 존재의식이 높고, 자율적 의지 약화.
- 잠재의식 속에 지도자와 체제에 대한 암묵적 복종의식 잔여
- 불합리한 현상(정치, 경제시스템)에 대한 판단 시각 및 기준 미정립

3) 체질화된 자기방어적 성향

- 징계에 대한 공포의식 잠재로 인한 피해의식
- 평가위주의 선택: 책임이 두려운 일에 대한 기피
- 직설적 先공격 표현: 타인보다 먼저 정당성 합리화를 주장해야 한다는 강박

4) 비판의식과 부정적 피해의식

- 생각의 중심이 긍정보다 부정에 치우쳐있는 경향
- 자기자신 학대: 긍정보다 부정적인 면만 부각하여 스스로 비판
- 타인 결함 판단능력 탁월, 지나친 지적: 정치조직생활총화의 영향

5) 잘못된 자본주의, 개인주의 관습의 피해

- 시장경쟁에서 자립적으로 생존해야 한다는 하나의 목적 하에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지나친 배금주의적 가치관 및 의식
- 잘못 형성된 개인주의 가치관, 법치질서 위반에 대한 무감각, 권력의존형 문제해결방식 등
- 생존 목적을 빙자한 비합법적 행위의 정당화 현상(사기, 절도, 살인, 마약 등)

26) 이 부분은 발표자의 극히 주관적 분석에 의한 것이므로 인용을 삼가주길 바라며, 이견이 상이할 경우 토론을 통해 지적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V. 결론 - 통일을 위한 정치사상교육 폐해극복 과제

- 북한체제에 의해 변형된 북한주민 의식(충성과 공포의식의 공존)은 인간이 타고난 본질적 속성(자율성, 창의성)과 대립되는 것임.
- 북한체제의 정치사상교육과 정치사상통제가 인위적으로 의식을 변형시켰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본연의 속성이 잔여해온 부분도 있음.
 - 인간본연의 타고난 감성(7가지 감정 표출에서 제어 받았을 뿐 의식 속에는 여전히 잠재), 선함을 중시하는 인간애, 공동체의식, 가족애, 부모에 대한 효도, 책임감과 성실, 친지에 대한 의리 등은 여전히 존속.
 - 통일 후 통합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의 이질성 극복 및 동질성 회복을 위해 북한주민 의식 속에 잔여해 온 긍정적 요소들은 적극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
- 단, 변형된 의식이 본연의 타고난 의식을 억압하는 사회제도에서 살았던 후유증은 남아 있으므로 남북한 통합을 위해 이를 타파하기 위한 대안마련을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임.
- 통일 후 남북한 교육통합, 사회통합을 준비해야 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사상교육의 폐해를 극복하고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통한 건강한 통일한국을 건설해 나가는 것임. 그러기 위하여 (1) 학교 교육에서 정치사상과목 폐지 및 대체 교육 방안 모색, (2) 정치사상교육을 통해 잘못 주입된 의식을 자유민주주의 민주시민의식으로 전환시키는 대체 교육방안 모색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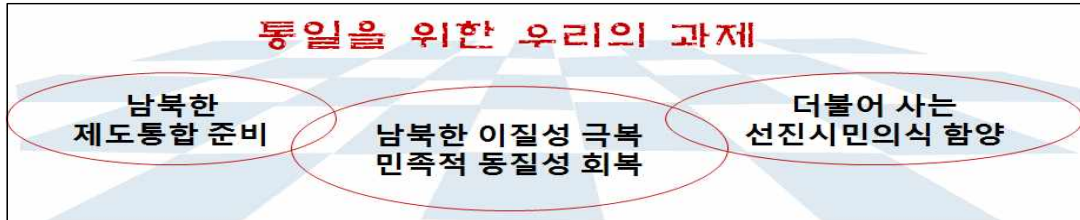
1. 정치사상 교과목 전면 폐지와 대안교육 모색

- 북한의 정치사상교육 교과를 폐지하고 학교·가정·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장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 모의 실현을 통해 구체화된 방안 수립.
 - (1) 통일 이후 북한 학교 교과목에서 10~30%의 비중을 차지하는 정치사상과목을 전면 폐지하고 이를 역사교육, 민주시민교육 교과로 대체.
 - (2) 특히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포함한 민주시민교육에 중점을 두어, 남북한 내적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 극복 대안기제로 활용.
 - (3) 북한주민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우상화 등 기억 속에 잘못 주입된 의식을 감성적 접근, 종교적 접근을 통해 변형.(종교단체를 활용한 내적 변화 촉구 교육, 대중매체·미디어를 활용한 감성 교육, 정규과정으로 구성된 정치교육 프로그램)

2. 정치사상교육의 폐해 극복 - 인간본연의 속성 회복

- 정치사상교육을 통해 잘못 주입된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신격·신조화)의식을 새로운 통일 한국의 민주시민의식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기교육 커리큘럼, 감성적 교육방법 모색.
- 북한주민 의식 속에 잠재된 부정적 의식(이중적 자아, 수동적 객체화, 타인에 대한 공격적 비판의식, 징계 두려움으로 인한 피해의식)을 인간본연의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의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대안 마련

(1) 아카페적 사랑을 통한 상처 치유, 내적 감성 회복,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인들과 행복하게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소통 및 배려의식, 긍정적 힘 배양.



(2) 한국 국민의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선행하여 북한주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정신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해나가야 할 것임.

- 무엇보다 먼저 온 통일미래, 현재 한국에 정착해있는 3만 여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 정착에 성공하여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관용 및 배려, 사회적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Session 4

**“남한 입국 후 탈정치사상교육의
남한 학교 현장에서 겪는 북한이탈교사들의 어려움”**

윤봉이 교사

(청진 제1사범대학 영어전공, 회령남문중학교 교사)

남한 입국 후 탈정치사상교육의 남한 학교 현장에서 겪는 북한이탈교사들의 어려움

윤봉이 교사(여명학교 전담코디네이터)

1. 북한교육의 특징

1. 북한에서의 학교의 의미

북한은 교육을 통하여 모든 인민이 ‘주체형의 사회주의적 새 인간’이 되기를 원한다. 이를 북한의 헌법과 교육강령(사회주의교육폐제)에서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체형의 사회주의적 새 인간’이란 김일성가계에 절대 충성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필요한 생산기술 기능을 소유한 인간 말한다. 즉 교육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인간으로 교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북한은 “교육은 나라의 흥망을 좌우 한다”며 국가에서 교육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을 통해서 정치화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에서 학교의 의미는 당의 위임을 받아 학생들을 당이 원하는 사회주의 새 인간으로 육성하는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다음세대 인민들이 충성스런 사상을 갖도록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정치사상화를 하는 거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등교육과정(2012년 9월 25일 초등교육과정을 4년에서 5년으로 늘임, 유치원 1년, 초등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 중학교 3년)까지 총 12년의 “무상의무교육제도”를 운영하여 모든 인민이 12년간 교육을 받으며 사고가 확립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

2. 북한에서의 교사

북한교육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당에서는 교사에게 “교원(교사)은 직업적 혁명가이다”라며 권위를 부여하고 일선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는 당 간부들이나 군대를 포함한 다양한 직업에서 윗사람일지라도 “동지”나 “동무”로 불리지만 교사는 유일하게 “님”이란 호칭을 붙여 “선생님”이라고 불린다. 또한 각 지역에 사범대와 교원대를 설치하는데 예비교사들이 사범대를 진학할 때에도 고등학교과정까지의 실력 뿐 아니라 토대 및 출신성분, 외모, 인성, 특기를 갖춘 학생들을 선발한다.

이는 교사에게 당과 국가를 대신하여 학생들을 믿음직한 일꾼이며 혁명가로 양성시키려면 교사가 권위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를 임용할 때도 그런 특별한 권위에 합당한 위용을 갖춘 사람들을 뽑으려 한 것이다.

3. 학교 안에서의 정치사상화

1) 교과수업을 통한 정치사상화

북한의 교육과정에서 독립교과로 운영되는 정치사상교과는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춰 학과목으로 개설하여 운영한다. 소학교(초등과정)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정숙의 어린 시절, 중등과정에서는 혁명활동과 혁명역사 등으로 이름을 바꾸어 심화하여 교육시키고

있다. 정치사상교과의 주요 내용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 혁명적 수령관, 수령의 지위와 역할, 수령의 위대성, 충실성 교양, 원리 교양, 덕성교양, 주체의 혁명이론과 영도 방법,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의 본질과 해독성 교양, 계급교양 등이다. 독립된 정치사상교육 뿐 아니라 국어나 영어, 한문 등 일반 교과목에서도 사상적인 내용들을 예시로 많이 차용하고 있다.

2) 조직생활을 통한 정치사상화

북한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등교하면 교실 벽에 걸려 있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를 정성스럽게 닦는 보위사업(정성사업)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이는 충성심의 척도가 된다. 학교생활에서 첫 수업을 시작 할 때에 학생들에게 “365일 위대성 교양자료”를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이는 해당 날짜에 일어났던 김정일 업적을 학생들에게 감동적으로 인식시키고 학생들이 그대로 따라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김정일의 위대성을 선전하여 학생들이 그를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매일 교육시키는 것이다. 일방적이고 반복적 교육은 세뇌를 낳는다.

교과 수업에서는 모든 수업에서 반드시 5~10분간의 “위대성 교양(당정책 교양)”을 하여야 한다. 교과 내용 중 관련성 있는 단어나 문장, 주제에서 위대성 교양 내용을 추출하여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주 1회씩 “학습회”라고 하여 김일성부자의 위대성 및 당정책 교양을 배우고 이를 문답식 경연을 진행한다. 또한 1년의 1회씩 학교 간 또는 학급별로 문답식 경연을 한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보상이나 대가는 없다. 이를 바라는 것 자체가 충실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요구하지도 못한다.

북한에서 모든 학생들은 소학교 2학년부턴 ‘조선소년단’에 입단하여 정치조직에 편재되도록 한다. 소년단입단은 김일성, 김정일 생일을 비롯한 북한의 주요 기념일에 학급에서 모범적인 학생 순으로 순차적으로 나뉘어 입단시킨다. 입단식에는 정치기관의 주요간부들이 참석하여 입단하는 어린이들에게 붉은 벅타이와 소년단 휘장을 메어주는데 일찍 소년단에 입단하는 학생들은 자긍심을 갖게 된다. 중학교 4학년에 소년단 과정을 마치면 여러 심사를 거쳐 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에 가입을 시키며 증서와 김일성 및 김정일의 뺃지를 수여한다.

소년단과 청년동맹의 조직은 담임교사가 분단지도원을 맡아 반 학생들을 지도한다. 북한의 학급은 학급반장을 위주로 하는 행정체계와 분단위원장을 위주로 하는 정치조직으로 2원적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행정체계의 수장인 학급반장이 정치조직의 “조직부위원장”으로 자동 위임되기에 어린 학생들부터 당 조직이 행정조직의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

학급 정치조직에서 매 주일 마다 시행되는 생활총화는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나 말씀에 어긋난 행동에 대한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을 통하여 김부자에게 충실한 조직성원이 되도록 자신을 수양하도록 한다.

북한에서는 각 조직마다 당에서 파견된 담당보위원과 담당 보안소원(이전 명칭: 주재원)이 있다. 학교에도 이들이 주 1회 또는 월 1회 방문하여 교사들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또한 일반 교사나 학생들 중 정보협력자가 있어서 동료교사나 학생들 중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담당보위원에게 상시적으로 보고한다.

3) 이벤트를 통한 정치사상화

북한에서는 김일성가계의 생일들마다 학생들로 하여금 “충성의 노래모임”이라는 공연을 하여 위대성 찬양을 하도록 한다.

북한에서는 매년마다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광복의 천리길”과 “배움의 천리길” 답사 행군을 하도록 한다. 이는 김일성이 14살의 나이에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겠다고 만주로 나선 업적을 기리는 위한 취지이다. 전국에서 선발된 학생들은 김일성의 당시 차림 그대로 국방색 군복과 군화를 착용하고, 배낭을 메고 김일성 찬양가를 부르며 행군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어린 김일성에 동화되어 충성심이 고취된다.

소년단과 청년동맹에서는 ‘좋은 일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헌납하도록 한다. 학년별로 토끼 가죽을 할당하고, 꼬마과제(꼬마계획)를 통해 폐품을 모아 헌납하도록 한다. 할당량을 모두 이행한 사람들은 조직생활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4년에 한 번씩 전국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여 평양에서 ‘7.15 최우등생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김정일이 학생시절 공부를 잘하여 7월 15일에 성적우수 상장을 받았기에 이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전국의 학생들이 김정일을 본받아 열심히 실력 향상에 힘쓰도록 독려하기 위함이며 이때 김정일의 천재성과 위대성을 인지시키는 기회이다. 이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평양 견학과 상장, 소정의 선물을 주어 자긍심을 갖게 하고, 김정일의 위대성을 교육하는 기회로 삼는다

김일성(4월 15일)과 김정일(2월 16일)의 생일에는 평양에는 고등중학교까지 지방에는 초등학교까지 사탕 및 과자 등의 간식류 (1kg)를 ‘사랑의 선물’로 전달한다. 이때 나라사정이 어려운 속에서도 지도자가 아이들을 위하여 선물을 제공하였다고 감동하게 해 학생들이 나라와 수령에 충성하도록 유도한다.

II. 북한출신교사로서 남한 학교에서의 어려움

남한의 교육현실은 북한출신 교사와 학생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어려웠다. 사회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교육이고 그래서 교육현장에서 그 사회만큼의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기입국한 탈북청소년들과 근래에 전담코디라는 제도를 통해 19개 학교에서 20여명이 북한출신 교사들이 남한 학교 현장에서 겪는 것이 통일을 선행(先驗)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1. 명분과 당위성의 부재

북한교사출신들은 북한에서의 전공과 달리 통일교사와 도덕교사로서 수업을 하거나 보조교사로서 학습이 뒤떨어지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일반학교에서 통일 수업을 진행할 때 북한출신 교사들은 북한 학생들과 다른 남한 학생들의 분위기에 놀란다.

북한에서의 체계적인 정치사상교육으로 인하여 어린 학생들이라도 통일에 대하여 당위로 생각하고 인민모두가 통일을 민족의 숙원으로 갈망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출신 교사로서 남한에서 통일교사로 수업에 임하여 보니, 남한학생들은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통일 수업에 대한 필요성을 거의 느끼고 있지 않았다. 남한 교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에서는 설명

이 필요 없는 당위인 것들이 남한에서는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하고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 자체가 당황스러웠다. 우리는 북한에서 어려서부터 정치사상교육을 받으며 당위로 여겼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해 본적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해 본 적이 없었던 북한출신 교사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인 것이다. 북한에서는 조직적인 정치사상교육으로 인하여 정치사상적 주제들을 비판의식 없이 수동적으로 내재화시켰기에 토론이 필요 없는 것이었다. 만약 이러한 주제로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일 날 일이었다. 우리들은 남한에 와서야 비로소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부분이 통일 이후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가치관의 변화

북한에서 수령에 대한 절대 충성을 교육한 효과는 실제로 “화재가 난 교실에 뛰어들어 김일성부자의 초상화를 건지고 죽거나, 사적지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적유물을 보호하다 죽거나, 화재 속에서도 김일성의 뺨지를 손에 쥔 채 죽거나, 배가 물에 가라앉을 때 김일성부자 초상화를 물에 젖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감싸 그것을 안고 죽은 사례” 등을 통해 나타난다. 또한 이를 초당성, 초종교성의 귀감이 되는 사례라며 교육시킨다. 북한에서 ‘최고선’으로 생각되던 것들이 남한에 와서는 이러한 것들이 인간 존엄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북한 학생들에게 이러한 정치사상교육을 해야 했던 교사로서 민망하고 미안한 생각까지 들었다. 북한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배웠고 가르쳤으며, 위반할 때에는 비판과 처벌이 뒤따랐기에 이를 당연하게 알고 살았었다. 하지만 남한에 와서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으며, 이때 남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된 것 같고, 지금까지의 나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으며,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또한 현재 북한은 기존의 중시하던 정치 사상교육이 힘을 잃고 개인이나 자본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따라서 남북한이 통일되면 북한지역에서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가 찾아 올 것이고 이럴 때 제시할 수 있는 가치관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한다.

3. 교육내용의 차이

북한출신 교사들과 학생들을 남한의 교육환경에서 북한과는 교육내용들의 차이에서 매우 당황한다. 북한은 교육을 통하여 정치를 구현하기 때문에 많은 왜곡이 교육내용에 존재한다. 가장 큰 차이는 역사부분인데 우리는 남한에 와서 625를 북한이 일으켰다고 이야기할 때 가장 놀랐었다. 북한에서는 고대사와 근현대사를 매우 많이 왜곡하고 ‘조선역사’를 주체적인 관점의 국정교과서만을 사용한다. 반면 남한에서는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가치에서 역사를 가르치기에 사고의 방향성과 경향성이 달라서 우리들에게는 매우 어렵게 느껴진다. 또한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외의 역사적 인물들이 크게 강조되지 않는다. 북한에서는 교과서 외의 시각은 존재할 수 없지만, 남한은 다양한 시각이 허용될 뿐 아니라 비판까지 가능한 현실이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북한출신학생들이나 교사들이 북한의 정치사상교육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과목은 국어, 역사과목이다. 국어는 내용 자체가 다르다. 북한에서의 문학작품의 우수성을 말할 때에도 정치 사상적 내용이 포함된 글들이 아름답고 훌륭한 글이기에 주로 그런 내용의 작품들이 교과서에 등장한다. 북한의 국어교과는 주제가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남한에서는 수업

을 통해 주제를 찾아나가는 작업을 한다. 남한에서 다양한 종류의 국문학을 접하면서 주제 자체를 파악하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진다. 북한에서는 사상적인 지문 외의 다양한 장르의 지문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문 해석능력과 적응력을 기르기가 쉽지가 않았다. 또한 도덕이나 사회과목도 북한과 남한이 가장 큰 차이가 나는데 남한의 도덕이나 사회과목에서 북한처럼 국가가 원하는 정치사상교육은 전혀 없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시되는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이런 수업을 할 때도 정부에서 정해진 논리를 학생들에게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도 매우 놀랍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은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이과, 문과 등의 구분이 없고 영재들의 경우는 뽑아서 따로 교육을 시키고, 취업도 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남한에서는 문, 이과와 향후의 전공과 직업까지 학생들이 선택하는데, 북한학생들에게 이런 선택을 하라고 하거나 북한선생님들에게 지도를 하라고 한다면 매우 당황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북한출신 교사들이 일반학교에서 전담코디로 있으면서 수학이나 물리, 화학과 같은 과목들은 용어의 차이 외에는 별 문제는 없어 지도를 해 주지만 북한식 용어 그대로 가르친 적이 많았다. 언어 통합을 고려할 때 먼저 교과서와 교사 교육을 통해 언어 통합을 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4. 교육방법의 차이

북한에서는 정부에서 발간한 국정교과서를 외우게 하는 원문 통달식으로 주입식교육을 한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학생들의 응용능력과 창의성을 제한한다. 교사들도 북한에서는 학교장이 맡겨준 일을 하고, 미리 검열 받은 교수안대로 수업을 하면 되지만, 남한에서는 교사가 스스로 교육방법을 연구하며 만들어 가야 한다. 남한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응용능력이 발휘되도록 지도를 하며, 문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결과를 얻도록 지도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북한 출신 교사나 학생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진다.

우리 북한출신 교사들은 남한에 입국하여 한국 교육에 대하여 우스게 소리로 이야기 했다. 남한의 교육에는 김일성의 말씀이나 교시가 없이 모든 수업 과정을 교사가 이끌어 나가야 한다. 남한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북한은 결과가 좋으면 모두 좋은 것이다. 북한에서는 정치사상교과만 잘해도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았지만, 남한에서는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하고, 게다가 학생들의 창의성도 도출해야하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당 조직 없이 규율 통제가 가능하고, 생활총화 없이 학생들을 교화시킬 수 있으며, 때리지도 못하고 말로써만 훈육이 가능한 일인지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5. 평가 방법

북한에서는 수령, 당, 대중에게 충실한 인민을 키워내기 위해 정치사상교육에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켰다. 다른 학과목의 성적이 높지 않더라도 정치사상과목의 성적이 좋으면 인성도 훌륭하고 좋은 학생으로 평가된다. 반면 남한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좋은 학생으로 평가되는 것 같다. 또한 과목 평가에 있어서도 북한에서도 여러 과목이 존재하지만 그 과목 내용 중에서 사상성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에 지식과 사상적인 접목을 한 경우에는 평가를 좋게 할 수 밖에 없다. 반면 남한은 각 교과목마다 중요한 것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때론 정답이 없거나 여러 개인 경우가 있어 평가기준이 다른 것도 어렵게 느껴진다.

6. 교사의 역할 및 권위

북한에서는 교사에 대한 권위와 존경심이 강하다. 학생이 입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담임이 바뀌지 않고 교사가 절대적이기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교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한다. 교사들은 직업적 혁명가로서 학생들을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과목 뿐 아니라 인성이나 당성 및 생활지도에도 열심이다. 또한 북한은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사회화가 이뤄지므로 학원이 없다. 따라서 교사는 생활지도 뿐 아니라 교과지도도 책임감을 가지고 퇴근 이후에도 남아서 지도한다.

그러나 남한에서 교사들은 북한과 달리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과 실력이나 생활지도에서 책임성이 약한 듯 보인다. 지식적인 것은 학원에서 다 배워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인성적인 것은 학교 다니는 동안 별 사고 없이 다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무사히 졸업하면 그것이 교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듯하다. 또한 북한에서는 학생들이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국가차원에서 진행되는 동원사업에 교사가 최일선에서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지만, 남한에서는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이었다. 북한에서 학생이 교사에 대한 교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남한의 학생들이 교사에게 도전하는 현실을 보았을 때, 우리 북한출신 교사들은 이러한 남한의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하여야 할지 교사로서 당황스럽다.

7. 정치교육으로 인한 후유증

북한주민들은 체계적인 정치사상교육과 정치조직으로부터의 생활총화 등으로의 감시나 통제 안에서 살다보면 당의 지시와 김일성부자의 교시 등에 정해진 대로만 하려고 하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또한 당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증 속에 살아가야 한다.

북한에서는 어려서부터 정치사상 교육을 입체적으로 받았고, 주변사람들의 신고와 비판을 주고받는 생활총화를 했어야 했다. 늘 그런 상황에서 생활하다보니 비판적인 시각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 남한에서 때로는 무언가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에는 ‘비판해 보라’는 소리로 듣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서 공동체에서 민망한 눈총을 받을 때가 많았다. 부정적인 판단과 비판이 본능처럼 된 것을 남한에 와서 비로소 알았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또한 인민들이 사회생활에서 언어나 업무수행에서 일정한 틀에 짜여진 대로만 수행하도록 살아야 했다. 반면 남한은 사회생활을 할 때 개인이 직접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충분히 반영한 성과를 발휘해야 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해 본적도 없고 그렇게 하면 반동으로 몰리는 삶을 살았기에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 북한출신들에게는 거의 트라우마 수준의 어려움이다.

북한에서 학생들은 조직생활총화에 습관이 되어 자아비판이나 호상비판에 대해서는 잘 하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알리고 관리하는 (Self-love, self-management, self-public relations) 방법을 모른다. 북한에서는 모든 성과와 업적은 다 “어머니 당의 품에 안긴 덕”으로 찬양을 하므로 나 자신의 가치와 장점을 잘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목숨보다 당과 김일성 가게를 더 중시하는 삶을 살아야 했기에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다. 북한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또한 생활총화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 잘못으로 받아 들여야 하고, 개인의 성과라 할지라도 모두 김부자의 은혜와 덕 때문이라 여기며 수상 소감이나 성과 발표에서 과도한 찬양을 해야 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말할 기회가 생기면 남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기계적으로, 과장하여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부분에 감사하고 치하하는 방법은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아랫사람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스킬이 부족하여 배워야 할 것 같다.

III. 북한출신 교사와 학생들을 통한 실질적 통일준비방안

북한은 변화하고 있다. 지금의 북한은 여러 통로를 통해 북한 밖 소식을 접한 북한인민들이 정부를 별로 신뢰하지 않으며 정부의 배급보다는 사적영역에서 돈을 벌며 장마당에서 생필품들을 해결하며 살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북한 당국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이 변화는 통일에도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제는 보다 면밀히 또 다방면에서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통일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 혹은 가치관의 차이일지도 모른다. 북한사람들이 평생의 진리이며 가장 중요하다고 배워왔던 것들이 부정되거나 의미 없어질 때 북한사람들이 느끼는 혼란은 지금 우리 탈북자들이 겪는 것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우리는 5000만 대 3만은 소수이기에 부적응을 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5000만에 대한 2000만의 부적응과 거부감은 또 다른 차원의 분단의 벽을 만들지도 모른다.

사회적으로 통합을 이야기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이 교육이다. 교육을 통하여 남과 북 모두를 통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하게도 아직 우리는 통일이 되지 않았다. 즉 아직 통일을 준비할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통일 후 북한지역의 혼란을 예견하여 통일이전에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실질적은 통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 와있는 북한출신교사와 학생들을 통하여 통일 이후의 교육시스템을 만들어보고 운영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시스템을 “통일준비학교”라고 여명학교는 제안하였다. 이러한 학교들을 운영하여 현재 남한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을 교육하여 그들의 남한사회적응을 도우며, 북한출신 교사들을 임용하여 통일준비인력으로 양성함과 동시에 통일이후 북한지역에 적용할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1석 삼조의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우리 북한출신 교사들이 남한에 와서 경험한 고충을 바탕으로 다음의 <통일 후, 북한의 탈정치 교육환경을 대비한 제언>을 제안하고 싶다.

<통일 후, 북한의 탈정치 교육환경을 대비한 제언>

1. 북한학생 특성에 맞는 통일 교육과정 개발
 -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대표 가치관 개발
 - 인간존엄성, 자존감 회복을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 창의력과 자기주도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내용 및 방법 개발
 - 교육용어 통합
 - 통일 교과서 발간 및 시범 사용

2. 북한출신 교사 재교육과 임용

3.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교육 문화 개발

4. 통일준비학교 시범운영

북한출신 교사들의 장점은 많다. 학생들에게 헌신적이고 맡겨진 학생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장점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우리와 함께 일하며 겪는 많은 시행착오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기다려주어야 한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교사들도 우리가 겪었던 상황들과 비슷한 것을 겪을 것이다. 통일남한에서 온전한 통합을 이루려면 교육이 중요하고 특히 북한지역의 교육이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북한지역학교에서는 기존의 북한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 교사들이 가르치면서 느끼게 될 것들과 학생들이 배우면서 느끼게 될 것들을 통일준비학교에서 모두 경험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면서 노하우를 축적한다면 통일이후를 긍정적으로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열심히 공부해서 문제 푸는 방법을 안다면 시험은 기회이고 축제가 되는 것처럼 통일도 어렵겠지만 북한사람들을 잘 알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다.

